

2018년도 국정감사 요 구 자 료

2018.11



대통령비서실

2018년도 국정감사 요 구 자 료

2018.11



대통령비서실

목 차

• 광상도 위원

1. 2017.5.10.~2018.10.14.까지 비서실장 결재 문서 목록	3
2.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 및 감사결과 보고서	4
3. 2017.5.10.~2018.10.14.까지 외부기관(감사원,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결과 보고서	5
4. 2017.5.10.~2018.10.14.까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6
5. 2017.5.10.~2018.10.14.까지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7
6. 2017.5.10.~2018.10.14.까지 설문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8
7. 2017.5.10.~2018.10.14.까지 설문조사 발주 현황	9
8. 내규, 지침 등 규정집	10
9. 2017.5.10.~2018.10.14.까지 대통령비서실 일반현황	11
10. 2017.5.10.~2018.10.14. 까지 소속직원 재취업 현황	13
11. 현안 및 국회 건의사항(법률, 예산, 제도 등)	14
12. 2017.5.10.~2018.10.14.까지 직원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지급내역	15
13. 각종 위원회 현황 및 2017.5.10.~2018.10.14.까지 활동상황	16
14. 2017.5.10.~2018.10.14.까지 법적소송현황	19
15. 2017.5.10.~2018.10.14.까지 보도해명(참고)자료	20
16. 2017.5.10.~2018.10.14.까지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1
17.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22
18.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직무외 영리수입현황	23

19. 2017.5.10.~2018.10.14.까지 1000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4
20.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 관련	25
21. 법률자문 관련	26
22. 2017.5.10.~2018.10.14.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7
23. 2017.5.10.~2018.10.14.까지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제안이유 ...	30
24. 2017.5.10.~2018.10.14.까지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31
25. 2017.5.10.~2018.10.14.까지 대통령 공약별 이행추진현황	32
26~29.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에서 정부부처, 국회 사무처·국회의장, 대검찰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으로 발송한 공문목록 및 사본	33
30.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설명 및 관련규정	34
31.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직위들 중에 정무직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현황	35
32. 2018.10월 현재 정부 부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장 및 각 부처 1급 이상 공석 현황	36
33. 대통령비서실 직제(조직도) 및 인원 현황	37
34.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40
35. 2017.5.10.~2018.10.14.까지 월별, 수석실별, 직급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41
36. 2017.5.10. 이후 소속 직원 연월차 사용 실적	42
37. 2017.5.10.~2018.10.14.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 받은 회의수당	43

38. 2017.5.10.~2018.10.14.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직원들이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 현황	44
39.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로 파견된 각 정부부처별 (공공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	45
40. 2017.5.10.~2018.10.14.까지 일자별 청와대 브리핑 현황	46
41. 2017.5.10.~2018.10.14.까지 각 비서실의 클린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47
42. 2019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48
43. 2017.5.10.~2018.10.14.까지 예산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49
44. 2017.5.10.~2018.10.14.까지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후 조치결과	50
45.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내·외빈에게 선물한 기념품 목록	56
46. 청와대에서 합참에 지시한 ‘남북 군사력 비교’에 따른 제출자료	57
47.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청와대, 전수조사 추진 결과	58
48. 2017.5.10.~2018.10.14.까지 소속 직원들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증빙자료	59
49.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초과근무, 출장 일자별 현황	60
50.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시 후보가 청와대에 제출한 우석대 경력증명서와 관련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쳤는지	61
51. 사립대에서 2년 계약을 맺은 교수가 실제 6개월만 근무하였지만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해 공직에 응시 채용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62
52.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 보안시스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또는 사이버공격) 시도 및 피해 현황	63

53.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로 발송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관련 문건 사본 및 업무망 등 활용협조 요청사항	64
54.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관련	65
5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 현황 조사결과	66

• 권칠승 위원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69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0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1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72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73
6.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74
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3
8.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75
9.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5
10. 최근 10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76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77
1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8
13. 징계내역 및 회의록	79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80

• 김병욱 위원

1. 2013~2018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일체 83
2. 2013~2018년 현재 기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84
3. 2013~2018년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 이행 내역 85

• 김성태 위원

1. 2017. 5. ~ 2018. 10.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89
2. 2017. 5. ~ 2018. 10.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90
3.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국회동의 여부 필요 검토 경과 및 검토내역 일체 91
4. 2017. 5 ~ 2018. 10 외교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5. 2017. 5 ~ 2018. 10 국방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6. 2017. 5 ~ 2018. 10 국가정보원과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7. 2017. 5 ~ 2018. 10 교육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8. 2017. 5 ~ 2018. 10 국토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9. 2017. 5 ~ 2018. 10 문화체육관광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10. 2017. 5 ~ 2018. 10 통일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2

• 김승희 위원

1.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95
2. 최근 5년간 예산절감을 위한 내부지침, 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 96
3.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주요 사업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97

4.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98
5.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99
6.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직원 연가 사용 현황	100
7. 기관 내규, 지침	101
8.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결재 문서 리스트	99
9. 2019년 사업별 설명자료	102
10.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103
11.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99
12. 현 정부의 기관별 재산신고 대상자 재산신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실 등에 제출한 해명서	104
13. 비서실 소유 차량 현황	105
14.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106
15. 5급 행정관 이상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역, 경력, 출신학교 등 기본 현황	107
16. 행정관급 이상 현재 공석 현황	111
17. 대통령 친인척 현황 및 공직활동 내역	112
18. 2013년 이후 연도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13
1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VIP 전용기, 헬기, 차량정비 및 운영 현황	114
20. 2017 예산 이전용 내역, 부서, 사업명, 금액, 사유, 결재권자 등	115
21.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116
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114

23. 2017년 1월 이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 일별, 소속, 성명, 직급, 직급변동 여부, 담당업무, 직전부처명	117
24. 2018년 1월 이후 5급이상(비서관, 수석비서관 등 포함) 신규임용현황 소속, 성명, 직급, 주요경력, 주요업무	118
25. 2018년 1월 이후 생산접수문서 목록(비공개 포함)	99
26.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자료 전문	106
27.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106
28. 2018.1월 이후 대통령 훈령 현황	124
29.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125
30. 대통령 지시사항 해당부처 전달 경로	126
31. 각 부처 보고사항 대통령 전달 경로	127
32.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전문 ...	128
33.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99
34.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99

• 서영교 위원

1. 최근 5년간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및 인원, 대상자 명단 일체	131
2. 역대 정부별 특별사면 횟수 및 인원 등	131
3. 최근 5년간 대통령실에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현황	131
4.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현황 및 결과	132
5. 최근 5년간 장애인,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고용현황 및 업무내용, 수당	133

6. 최근 5년간 현재까지 대통령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134
7.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청와대 직원 훈장, 포상, 표장 내역	135
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136
9.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자체 징계현황	137

• **성일종 위원**

1. 부처 업무보고서	141
2. 부처 예산현황 자료	141
3. 2015~현재까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42
4. 2015년~현재까지 결산사업 설명자료	143
5.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3
6.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4
7. 2015년~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145
8.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제2항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45
9. 2015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일체	146
10. 2015년~ 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47
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148
12. 2015~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149
13.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150
14. 2015~현재까지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151

15. 2015년~현재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152
16. 2015년~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153
17. 2015년~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154
18. 2015년~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155
19. 2015~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56
20.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157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158
22. 인사 복리 관련 내규	159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60
24. 2015년~현재까지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61
25. 2015년~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62
26.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63
27. 2015년~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164
28. 2015년~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164
29. 2015~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5
30. 2015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해외출장, 교육파견 현황	166
31.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167
32.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연도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168
33. 2015년~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	169

34. 2015~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170
35. 2015년~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71
36. 2015년~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173
37. 2015년~현재까지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174
38. 2015년~현재까지 직원 승진 현황	175
39. 2015년~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	176
40. 2015년~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177

• 손금주 위원

1. 각 실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81
2. 현재 각 실의 조직 관련	18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상황 향후 추진 계획	185
4.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85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86
6.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87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비서관급 이상과 관련하여	188
8. 최근 5년간 비서관급 이상의 연도별 국외 출장현황	189
9.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총무)	19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91
11. 현재 각 실의 업무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 현황	192

12. 현재 각 실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193
13. 현재 각 실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	213
14. 각 실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내역	214
15. 최근 3년간 각 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215
1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216
1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18
18. 최근 3년간 각 실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	222
19. 김영란법 관련	223

• 여기구 위원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	227
2. 기관에서 운영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231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징계내역	232
4.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발신처	233
5.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234
6. 최근 3년간 1) 법률자문 용역내용, 2) 연구용역 내역	235
7. 2018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237
8. 최근 3년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237
9.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지침하달 내용	238

10.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239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240
12. 최근 3년간 비품 구매내역	241
13. 최근 3년간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42

• 이양수 위원

1. 기관 기본 현황 자료	245
2. 대통령비서실 각 수석급 이상, 국가안보실 차장급 이상, 대통령경호처 각 실장급 이상 명단 및 학력, 주요 경력 등	248
3.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1
4.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용역업체, 비정규직 현황자료 일체	252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공문 수·발신 목록	253
6.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현황	254
7.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및 처리현황 목록	255
8. 2018년 9월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	256
9.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직원 징계 및 경찰·검찰 수사 현황	259

• 장병완 위원

1. 지난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263
2. 비서실 해당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64

3. 지난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서류 제출	265
4.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현황 및 운용관련 계획	266
5. 정부출범 후 예비비 집행현황 상세내역	267
6. 정부출범 후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268
7. 정부출범 후 폐기 물품 목록	269
8. 국정기록비서관실의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수시 열람해 볼 수 있는 핫라인 관련	270
9. 대통령 추천 인사 및 인사별 추천자 현황	271
10. 국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272
11. 정부출범 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273
12.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일체	273
13. 정부출범 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일시, 참가대상, 안건 회의록 사본 등 일체	274
14. 정부출범 후 월별, 실별, 직급별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276
15. 정부출범 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77
16.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278
17. 정부출범 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	279
18. 정부출범 후 대통령 훈령 현황	280
19. 정부출범 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281
20. 정부출범 후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282
21.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282
22. 비서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안건, 일자, 참석자 회의결과	283

23. 정부 출범 이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날짜, 안건, 논의결과	284
24. 정부출범 후 소속 공무원 연월차 사용 실적	285
25. 정부출범 후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286
26. 특별감찰반 구성 운영현황	287
27. 자체감사결과	288
28.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89
29. 비서실 정원 및 현원	290
30.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내역	291
31. 소속 직원 복리후생 실제 사례 내역	292
32. 비서실 소유 차량 현황, 보험금, 블랙박스 장착여부	293
33. 소속 직원 형사처벌 현황	294
34.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현황(장애인 의무고용포함)	295
35. 정부 출범 후 민원 처리현황	296
36. 청와대 청원게시판 운영 및 청원답변 등 처리 일체	297
37. 지난 5년간 소속 직원 비위 및 비리 적발 현황	298
38. 지난 5년간 특별보좌관, 자문위원 현황	299
39. 지난 5년간 외부 강의한 직원 명단, 강의장소, 강의일자, 주제, 대상, 강연료	300
40. 5급이상 행정관 출신 지역 분포현황	301
41. 지난 5년간 연도별 청와대 전산 사고 발생 목록, 사고 내용, 발생일, 발생사유, 처리결과	303
42. 지난 5년간 전용기 사용내역, 이동장소, 거리, 발생비용, 대통령 탑승여부, 탑승인원	304

43. 지난 5년간 연도별 인턴직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과정, 면접위원명단, 선발자 명단, 선발자 생년월일	305
44. 지난 5년간 정규, 무기계약, 비정규직 인원, 신설채용 퇴직현황, 평균근속년수 및 지급 임금 규모	306
45. 지난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307
46. 지난 5년간 연도별 4급이상 직원 재산신고 내용	308
47. 정부 출범 후 해명,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사 소송현황	309
48. 정부 출범 후 순방일시, 순방국가, 순방별 비서실 동행 인원 현황	310
49. 행정관급 이상 현재 공석 현황	324
50.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별 위원장, 위원 명단, 주요경력,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	325
51. 직원 징계 관련 비위자 적발현황 및 징계현황	345
52. 자체 징계 및 외부 수사기관 이첩 현황	346
53. 대통령 및 청와대 홍보 관련 지출내역(행사비, 대언론 지출 내역, 홈페이지 개설비 등 홍보 관련 지출내역 일체)	347
54.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348
55. 정부 출범 후 포상현황	349

• 장석춘 위원

1. 최근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353
2.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354
3.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55
4. 최근 5년간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56

5. 최근 5년간 업무보고 자료 일체	357
6.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358
7.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359
8. 최근 5년간 인력 현황	360
9. 청와대비서실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	365
10.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	366
11. 대통령 비서실 내 친인척 고용 현황	367
12. 클린카드 발급 현황	368
13. 최근 5년간 클린카드 사용내역	368
14. 업무용카드 사용 지침	369
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370
16. 자체감사, 기타 감사지적 조치사항	370
17.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처리 현황	371
1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371
19.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372
20.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	373
21.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74
22.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37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376
24.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377

25.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378
2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379
27. 최근 5년간 퇴사 직원 재취업 현황	380
28.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현황 및 운용 계획	381
29. 2017년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382
30.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현황	383
31.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폐기 물품 목록 현황	384
32. 대통령 추천 인사의 인사별 추천자 현황	385
33.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총수 면담 및 간담회	386
34. 국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388
35. 2017년 제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정, 내규, 예규	389
36. 2017년 5월 이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390
37.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391
38. 前 정부의 잔여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처리 현황	392
39. 2017년 5월 이후 VIP전용기, 헬기, 차량정비 및 운영 현황	393
40. 대통령 지시사항 해당부처 전달 경로	394
41. 각 부처 보고사항 대통령 전달 경호	395
42.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전문	396
43. 2017년 5월 이후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397
44.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398
45.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398

46. 2017년 5월 이후 소속 공무원 연월차 사용 실적	399
47.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일자,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400
48.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 현황	401

• 정유섭 위원(I)

1.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북한경제개발계획’	405
2. 강정민 위원장 사임 관련	406
3.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그에 따라 각 부처로 발송한 공문서 일체와 그 효과	407
4. 경제 관련	408
5. 감사원장이 법사위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 전수조사를 하든지 할 것” 등의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416
6.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먼저 개입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달리 “청와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USKI 예산 지원 중단, 원장 교체, 폐쇄 등과 관련해 최소 5차례에 걸쳐 KIEP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417
7.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418
8. 이전 발언 관련	419
9. VIP 유럽 순방 중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차관이 청와대를 비운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재 시 DMZ 방문자들 관련 근무 규정	421

• 정유섭 위원(II)

1. 문재인대통령 지시 사항 현황 및 관리 카드 사본	425
2.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으로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사본 일체	426

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27
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회의 참석 수당, 정책 자문료 지급 내역 : 날짜, 금액, 사유, 수령자 이름 등	428
5. 드루킹 사건관련 자체 조사결과 및 관련 조사서, 보고서 사본	429
6. 대외경제연구원과 접촉, 면담, 보고 받은 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	430
7. 현재 특별감찰관실 현황(업무, 인력, 임대료 등) 및 감찰관 임명 계획	431
8.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 및 이행 조치 결과	432
9. 2017년, 2018년 현재 징계 받은 직원 및 사유	433
1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	434
11.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현황	435
12.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운영현황(유지보수횟수, 비용, 유지보수업체)	435
13.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이 소비한 전력량 및 전기요금(월별기재)	435
별첨자료 목록	437

곽 상 도 위 원

1. 2017. 5. 10. ~ 2018. 10. 14.까지 비서실장 결재 문서 목록

- ☐ 대통령비서실장 결재문서 목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따라 열람,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지정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요약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3. 2017. 5. 10. ~ 2018. 10. 14.까지 외부기관(감사원,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결과 보고서
- 동 기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제출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18. 3. 12. ~ 3. 28.)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익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
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

○ 감사원 처분요구서 : 별첨

4. 2017. 5. 10. ~ 2018. 10. 14.까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 별첨 : 동 기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 10. 14.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7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5.10.~2018.10.14.까지 직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원 비위 관련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2017.5.10.~2018.10.14.까지 설문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 ☐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5.9.~2018.10.14.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용역〉

구분	과제명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3	2018 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4	2018 년 정부 기조 및 정부 중점과제 방향 연구

〈2018년 정책연구용역〉

구분	과제명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3	평화 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 분석

7. 2017.5.10.~2018.10.14.까지 설문조사 발주 현황

- ☐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내규, 지침 등 규정집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 통일, 안보,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5.10.~2018.10.14.까지 대통령비서실 일반현황

- 기관명, 임무및기능, 정원/현원(남여구분), 예산, 부채, 평균
근속, 평균연봉, 평균연령, 이직률 등

□ 대통령비서실 정·현원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7. 12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0	236	155
현 원	421	12	38	222	149
결 원	△22	-	△2	△14	△6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8	12	40	224	152
결 원	△15	-	△2	△10	△3

- 다만,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17~'18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예산 (A)	'18예산 (B)
총 계	88,063	89,868
인건비	34,691	37,606
기본경비	19,532	18,518
업무지원비	19,856	16,392
국정평가관리	3,868	6,158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행정효율성 증진	256	256
정보화 추진	4,625	5,680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53	476

□ 대통령비서실 月 평균 급여현황

(2018. 9월 급여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행정관 이상 (연봉제)	행정요원 (호봉제)	비 고
인 원	423	273	150	
月 지급액	2,566,877	1,976,397	590,480	
月 평균 (인)	6,068	7,239	3,936	

※ 동 자료는 소득세, 건강보험 등의 공제 前 금액임

10. 2017.5.10.~2018.10.14. 까지 소속직원 재취업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취업 현황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참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및 취업이력 공시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1. 현안 및 국회 건의사항(법률, 예산, 제도 등)

☐ 2018년 8월 업무현황보고 별첨합니다.

**12. 2017.5.10.~2018.10.14.까지 직원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지급
내역**

- 출장일자 및 목적, 출장보고서 제출유무 표시

- ☐ 대통령비서실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기타 국가 주요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각종 위원회 현황 및 2017.5.10.~2018.10.14.까지 활동상황

□ 현 정부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 . 주요업무 : 국정과제 이행 추진 및 국가중장기 정책 개발
- . 근거법령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설 립 일 : '17.9.5
- . 위 원 장 :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일자리위원회

- . 주요업무 : 일자리 정책 기획 조정
- . 근거법령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설 립 일 : '17.5.16
- . 위 원 장 : 대통령
- . 부위원장 : 이목희 前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대응체계 구축
-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 . 설 립 일 : '17.8.22
- . 위 원 장 :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CSO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주요업무 :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설 립 일 : '03.4.7
- . 위 원 장 :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 자치분권위원회

- . 주요업무 : 지방자치발전계획 수립
- . 근거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설 립 일 : '13.9
- . 위 원 장 :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주요업무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설 립 일 : '05.9
- . 위 원 장 : 대통령
- . 부위원장 : 김상희 국회의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근거법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8.25)
- . 설 립 일 : '17.8.21
- . 위 원 장 : 공석

□ 국가교육회의

- . 주요업무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련 자문 및 정책 제언
- . 근거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설 립 일 : '17.9
- . 위 원 장 :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14. 2017. 5. 10. ~ 2018. 10. 14.까지 법적소송현황(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 포함)

- 원고/피고, 소송요지, 진행경과 등
- 소송비용, 배상금액 명시

* 별첨 : 판결문 또는 판결요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 소송	10건	진행 중
헌재 소송	5건	진행 중
민사 소송	6건	진행 중

15. 2017.5.10.~2018.10.14.까지 보도해명(참고)자료

☐ 2017.5.10.~2018.10.14.까지 ‘보도해명자료’ 부존재

16. 2017.5.10.~2018.10.14.까지 직원(인턴, 개방형직위-외부전문가 포함) 채용 및 퇴직 현황

- 일시, 성명, 직책, 채용 및 퇴직 형식도 표기 요망

- ☐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 직위를 제외한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 강연일시, 장소, 실제 강연시간 및 강연료 받드시 포함

-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총 48건의 외부강의가 있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직무외 영리수입현황
- 연도별, 직위/직책, 지급처, 내용(일시, 장소, 시간 포함),
금액 등

-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직원의 직무외 영리수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19. 2017.5.10.~2018.10.14.까지 1000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 10월 14일까지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 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역	계약액*
2017년(5월 이후)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68건	9,667
2018년(10.14)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69건	7,504

* 계약서 기준 / 해약, 배상 및 보상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배상 및 보상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 관련

- 임직원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 현황, 지원조건, 관련 규정
-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품위서
- 2017.5.10.~2018.10.14.까지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용 스마트폰은 92대 운용하고 있으며, 월 요금액은 1대당 평균 4만2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보안 스마트기기 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내용만 제출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법률자문 관련

- 2017. 5. 10. ~ 2018. 10. 14.까지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 귀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리스트(상세내용, 자문결과 포함)

☐ 법률자문 용역 의뢰건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2. 2017.5.10.~2018.10.14.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대외비, 비공개 지정절차 및 기준 포함)**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비공개 문서목록을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서의 공개여부(대국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는 기안 시 설정되며,
 - 비공개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은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 1. 비공개 문서목록 일체.
2. 비공개 대상 정보 1부. 끝.

붙임 2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3. 2017.5.10.~2018.10.14.까지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제안이유

☐ 대통령비서실은 소관 법령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24. 2017.5.10.~2018.10.14.까지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 대통령비서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 2017.5.10.~2018.10.14.까지 대통령 공약별 이행추진현황
(국정 / 지역공약 구분)

☐ 요청하신 자료는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26~29.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에서 정부부처,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 대검찰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으로 발송한 공문
목록 및 사본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
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30.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설명 및 관련규정

- ☐ 인사수석비서관실 등에서 공직후보자를 물색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관련 공적 기록과 당사자 진술(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등 포함) 등에 근거해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기타 구체적 내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31.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직위들 중에 정무직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무직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정무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현황(2018년 10월15일 현재)

**32. 2018.10월 현재 정부 부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장 및 각 부처 1급 이상 공석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8년 10월15일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관장과 각 부처 1급 이상 공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선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부처 기관장 : 1개 직위

- 특별감찰관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 4개 직위

-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19.1.1. 폐지 예정(광해관리공단과 통합)으로 사장을 공석상태로 유지

○ 부처 1급 : 7개 직위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조정관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에너지자원실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33. 대통령비서실 직제(조직도) 및 인원 현황

- 주요 간부현황 및 상세 프로파일(청와대 직책별 담당현황)
- 3급 선임행정관 이상은 주요이력 3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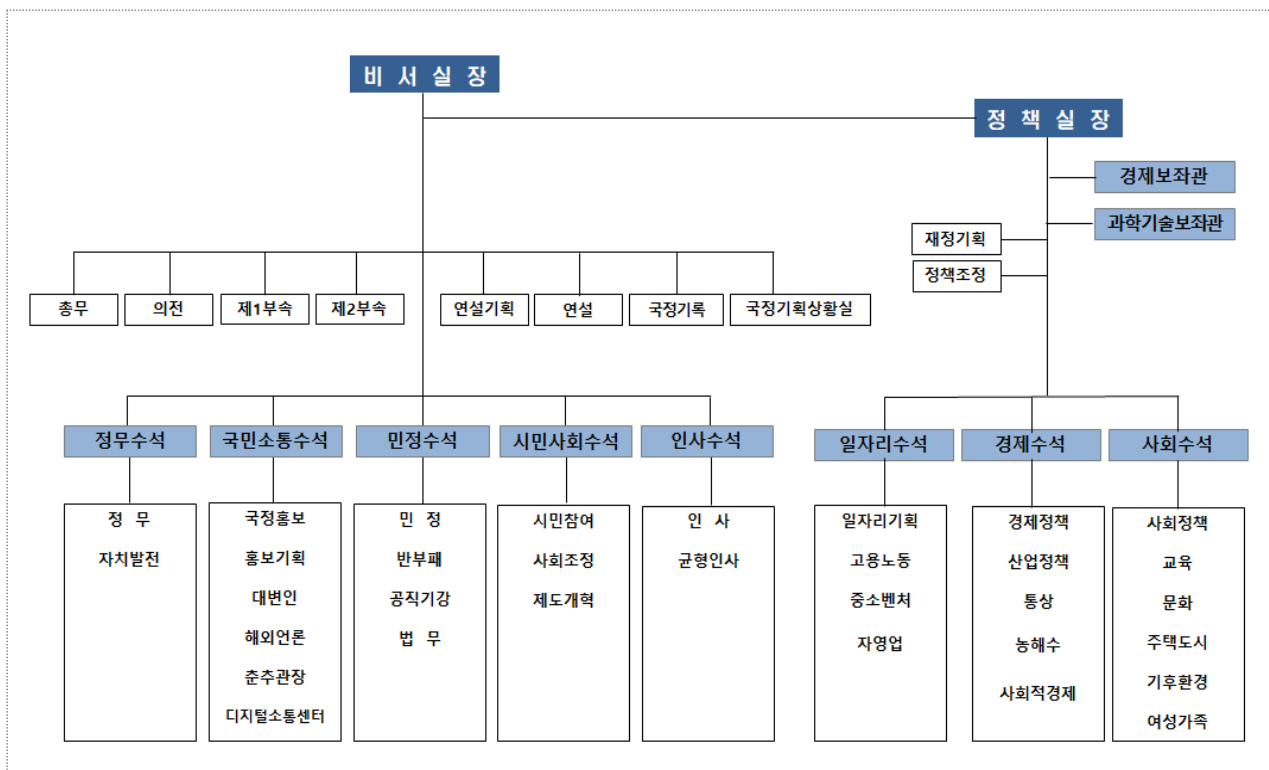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8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8	12	40	224	152
결 원	△15	-	△2	△10	△3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 자리 수 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34.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 관리

35. 2017. 5. 10. ~ 2018. 10. 14.까지 월별, 수석실별, 직급별 특수 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활동비(230)		특정업무경비(250-0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5. 10. ~ 12. 31.)	12,488	5,850*	3,711	663**
'18년(1. 1. ~ 10. 14.)	9,650	7,910	1,521	978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8,812백만원임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1,665백만원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 위 요구 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2017.5.10. 이후 소속 직원 연월차 사용 실적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7년은 법정연가일수 15일 중 12일(80%),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4일(20%, 6월말 현재)이며 연가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 2017. 5. 10. ~ 2018. 10. 14.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 받은 회의수당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8. 2017.5.10.~2018.10.14.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소속직원들이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 현황**

- 법률자문 등 증빙자료

□ 대통령비서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인이 회의참석 등을 통하여 정책자문이나 국가 업무에 조력을 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집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자문료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기타 국가 주요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로 파견된 각 정부부처별
(공공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군, 경찰, 외무공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2017.5.10.~2018.10.14.까지 일자별 청와대 브리핑 현황

☐ 2017.5.10.~2018.10.14.까지 브리핑 현황: 총 787건

☐ 일자별 청와대 브리핑 현황

- 청와대 홈페이지 內 브리핑 게시판 참고
- (<http://www1.president.go.kr/search>) 검색어 “브리핑”

41. 2017. 5. 10. ~ 2018. 10. 14.까지 각 비서실의 클린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2018. 10. 14. 현재 보유수량은 290개입니다.
-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 행사에 소요되는 식자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2019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별첨합니다.

* 별첨 :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끝.

43. 2017. 5. 10. ~ 2018. 10. 14.까지 예산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 ☐ 요구자료 중 예산심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44. 2017.5.10.~2018.10.14.까지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별 이관후 조치결과

□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주요내용 (2018.10.14. 현재)

연번	청원명	답변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변
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3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답변
4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5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답변
6-1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답변
6-2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답변
7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답변
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답변
9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답변
10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	답변
11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답변
12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답변
1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답변
14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답변
15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답변
16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답변
17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시요.	답변
18	경제민주화	답변
19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답변
20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답변
21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답변
22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답변
23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답변
24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답변
25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답변
26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답변

연번	청원명	답변
27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답변
28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답변
29	합정 ****스튜디오 불법 누드 촬영	답변
30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답변
31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답변
32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답변
33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답변
34	광주 택시탑승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답변
35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
36	유기전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답변
37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답변
38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합니다.	답변
39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답변
40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답변
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답변
42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개정	답변
43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답변
44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답변
45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원	답변
46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원	답변
47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답변
48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49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답변
50	디지털 성범죄 산업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합니다.	답변
5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답변
5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예정
53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	예정
54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예정

※ 상세 청원 및 답변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답변된 청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 소관부처별 이관후 조치결과

○ 소관부처별 이관 후 조치 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답변된 청원'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답변이 진행된 개별 청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 '국민청원 A/S 1탄, 디지털성범죄 대책,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355> ('18.6.15.)

【붙임】 보도자료1.

<국민청원 A/S 1탄, 디지털성범죄 대책,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청와대가 '청원 AS'를 시작했다. '청원 AS'는 청와대가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국민께 보고 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이다.

첫 '청원 AS'는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으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

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법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다.

엄 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원에 제기된 문제들은 단숨에 해결 가능한 문제보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당장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청원 AS’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끝/

- ‘국민청원 A/S 2탄,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불법촬영범죄 수사진행 상황’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0552> (‘18.7.3.)

【붙임】 보도자료2.

<(국민청원 A/S)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 불법촬영 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유튜버 양예원 씨 최초 촬영자가 검거되었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에 양예원 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예원 씨 사례와 같은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 유통 혐의로 26명을 공개수배 중입니다.

- 불법촬영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이들도 검거되었습니다.

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몰래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모아서 텀블러 판매광고를 통해 팔아서 1천6백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또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하거나 서로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해서 판매해 3천6백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두 명도 검거했는데 이들의 주거지에서 도합 50여만 건의 불법촬영물 파일이 발견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것이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이들이 불법촬영물 유포로 거둔 수익도 범죄수익으로서 기소전 몰수보전 중입니다.

- <불법촬영을 가능케 하는 위장형 카메라 단속 상황은?

최근에 나사못 모양 물카가 보도되어 충격인데 실제로 다른 전자제품이나 물병 등 교묘한 생활용품 모양으로 위장해서 숨길 수 있게 만든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판매, 수입에 있어서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여가비서관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과 광주에서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계와 라이터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 소라넷 운영자 검거, 국제 공조로 해냈습니다

지난주에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

버를 두고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운영진 6명중 3명은 검거됐고, 나머지 3명은 수배중인데 이들은 소라넷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해 왔으며 일당들도 그동안 해외 도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한 것입니다. 성범죄 예방과 처벌,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과 유포자 처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청원 A/S 시간에 진전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각 담당 부처와 국회 등에서 국민 여러분이 올려주신 국민청원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성과 등 조치 상황 대하여, ‘국민청원 A/S’코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공개·공유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45.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내·외빈에게
선물한 기념품 목록**

- 품명, 지급수량, 총 소요예산, 제작사 등 기재 가능한 부분
요약 제출

- 현 정부 출범 이후 손목시계, 벽시계, 커피잔, 머그컵(2종), 카드지갑 등 6종의 기념품을 제작하였고 청와대 방문 주요 인사와 대통령 주재 각종 행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 성격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제작업체의 정보는 중요 보안 사항이며,
- 대통령 기념품은 성격상 대통령의 일정, 국정 수행 활동과 연계되어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청와대에서 합참에 지시한 ‘남북 군사력 비교’에 따른 제출
자료

-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남북 군사력 비교’ 문서는 합참에서 작성한
군사비밀이므로 합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청와대, 전수조사 추진 결과

- ☐ 대통령비서실은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자는 가상통화 보유사실을 신고토록 하였으나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8. 2017.5.10.~2018.10.14.까지 소속 직원들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증빙자료

- ☐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 청와대 경비, 긴급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센터 운영 등을 위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자료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2017.5.10.~2018.10.14.까지 소속직원의 초과근무, 출장 일자별 현황

☐ 초과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9월 기준, 5급 이하 공무원)

인 원	月 총 시간	1인 평균시간(月)	비 고
206명	8,451시간	41시간	

☐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출장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가 주요 결정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시 후보가 청와대에 제출한 우석대 경력증명서와 관련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쳤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 공정성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사립대에서 2년 계약을 맺은 교수가 실제 6개월만 근무하였지만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해 공직에 응시 채용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 ☐ 동 사안에 대한 위법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처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2. 2017.5.10.~2018.10.14.까지 청와대 보안시스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또는 사이버공격) 시도 및 피해 현황(현황이 있을 경우, 해킹 근원지별 건수 구분 요망)

- ☐ 대통령비서실은 시스템 이중화,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및 문서 등 자료 암호화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해킹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로 발송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관련
문건 사본 및 업무망 등 활용협조 요청사항

- ☐ 맞춤형 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문건송부 및 업무망 활용협조 요청은 없습니다.

54.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관련

- ☐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 현황 조사결과

55-1. 청와대 전 직원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현황 조사결과 : 조사배경, 조사방식, 조사내용,
전수조사 결과

55-2. 직원대상 총무비서관실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공지내역

- 정부는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응한 바 있으며 대통령비서실도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내부공지 등을 통해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를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는 가상통화 보유사실을 신고토록 하였으나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권 칠 승 위 원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 이전 정부들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정부 자료는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8.3.12. ~ 3.28.)

지적사항	조치결과
<p>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p> <p>○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익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p>
<p>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p> <p>○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p>

※ 2017. 5. 10.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30.기준)
총등록건수	30,286	32,483	29,433	28,869	31,831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6.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가전쟁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이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발표 또는 공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여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보고 별첨합니다.

9.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10. 최근 10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문서수발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문서수발 목록 1부. 끝.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 이전의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5월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액 (백만원)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9.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4	2018년 정부 기조 및 정부 중점과제 방향 연구	9.2

〈2018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액 (백만원)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3	평화 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 분석	9.5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9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1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 ☐ 이전 정부들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예비비를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13. 징계내역 및 회의록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 병 옥 위 원

1. 2013~2018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일체

☐ 현 정부 2017 국정감사 자료 별첨합니다.

2. 2013~2018년 현재 기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 9.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6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2018년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 이행 내역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감사결과보고서 : 별첨)

<p>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p> <p>○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p>
<p>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p> <p>○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p>

※ 2017년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김 성 태 위 원

1. 2017. 5. ~ 2018. 10.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

□ 정부출범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17년(정부출범 이후)	12,488	5,850*
'18년(9월말 기준)**	9,650	7,300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8,812백만원임

※※ '18년 10월은 월마감이 미완료되어 9월말 기준으로 작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2. 2017. 5. ~ 2018. 10.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정부출범(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18년 10월은 월미감이 미완료되어 9월말 기준으로 작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3.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국회동의 여부 필요 검토 경과 및 검토내역 일체

- ☐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라 남북회담 등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는 남북군사합의 비준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였음.
- ☐ 법제처 심사결과, 남북군사합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거나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 이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였음.

4. 2017. 5 ~ 2018. 10 외교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5. 2017. 5 ~ 2018. 10 국방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6. 2017. 5 ~ 2018. 10 국가정보원과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7. 2017. 5 ~ 2018. 10 교육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8. 2017. 5 ~ 2018. 10 국토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9. 2017. 5 ~ 2018. 10 문화체육관광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10. 2017. 5 ~ 2018. 10 통일부와 송수신한 공문 리스트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김 승 희 위 원

1.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2. 최근 5년간 예산절감을 위한 내부지침, 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 이전 정부들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절감계획(17.5.25)을 마련하여

*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을 절감

○ '17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절감액은 57.2억원으로 자체 절감계획(53억원) 대비 4.2억원(7.9%) 추가 절감하였습니다.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절감 집행 현황 >

(금액단위: 백만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17년도	12,488	8,812 (70.6%)	3,675 (29.4%)	3,711	1,666 (44.9%)	2,045 (55.1%)

3.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주요 사업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공통 붙임자료 2018년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람

4. 최근 5년간('18년9월말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 8.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결재 문서 리스트
- 11.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 25. 2018년 1월 이후 생산접수문서 목록(비공개 포함)
- 33.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 34.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연도별, 월별)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6. 최근 5년간('18년9월말까지) 직원 연가 사용 현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7년은 법정연가일수 15일 중 12일(80%),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9일(45%, 9월말 현재)이며, 연가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기관 내규, 지침

- ☐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 사업별 설명자료

☐ 2019년도 예산 설명자료 첨부합니다.

10.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 ☐ 결산심사 관련, 2015회계연도까지의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며,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지적 및 조치결과는 <별첨>과 같음
- ☐ 예산심사 관련, 2017회계연도까지의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며, 2018회계연도 예산심사 관련 국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12. 현 정부의 기관별 재산신고 대상자 재산신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실 등에 제출한 해명서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비서실 소유 차량 현황

-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공용차량은 총 68대이며, 승용차량 51대, 승합차량 13대, 화물차량 4대입니다.

14. 국무회의 개최일시, 의제, 결과, 참석자

26.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자료 전문

27.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
보고서

□ 이상 요구자료에 대하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말 현재
까지 (2017.5.10.~2018.9.27.) 개최된 국무회의 회의록 총 78건을 첨부
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 국무회의 회의록 2017년 37건(제21회~제57회), 2018년 41
건(제1회~제41회).

**15. 5급 행정관 이상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역, 경력, 출신학교
등 기본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 직위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 자리 수 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박진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해승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임 종 석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6, 17대 국회의원 	
장 하 성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 위원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 병 도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윤 영 찬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 • 네이버 부사장 • NHN 대외협력담당 이사 •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조 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용 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조 현 옥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정 태 호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19대 선대위 정책상황실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무비서관 • 국회의원 보좌관 	
윤 종 원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 수 현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원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김 현 철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문 미 옥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자원센터 기획정책실장 	

16. 행정관급 이상 현재 공석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비고
정 원	288	12	42	234	
현 원	277	12	41	224	
결 원	△11	-	△1	△10	

17. 대통령 친인척 현황 및 공직활동 내역

- ☐ 4촌 이내의 친인척은 44명(남 18명, 여 26명)이며, 공직활동 내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3년 이후 연도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현 정부 출범 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정부출범 이후)	12,488	5,850*	3,711	663**
'18년(9월말 기준)	9,650	7,300	1,521	995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8,812백만원임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1,665백만원임

-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VIP 전용기, 헬기, 차량정비 및 운영
현황

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 성명, 발급일, 회수일 등

☐ 요청하신 자료는 경호처 소관업무입니다.

20. 2017 예산 이전용 내역, 부서, 사업명, 금액, 사유, 결재권자 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음

21.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에 대해서는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3. 2017년 1월 이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 일별, 소속, 성명, 직급, 직급변동여부, 담당업무, 직전부처명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국정협력을 위하여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원 전입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8년 1월 이후 5급이상(비서관, 수석비서관 등 포함) 신규
임용현황 소속, 성명, 직급, 주요경력, 주요업무**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주요 직위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18년 1월 이후 주요직위 임용현황

(2018. 10월 기준)

연 번	직	직 급	성 명	성 별	임 용 일	비 고
1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차관급	이용선	남	2018.07.04	
2	경제수석비서관	차관급	윤종원	남	2018.07.02	
3	의전비서관	고위공무원	김종천	남	2018.07.02	
4	제1부속비서관	고위공무원	조한기	남	2018.07.02	
5	연설기획비서관	고위공무원	최우규	남	2018.08.16	
6	정부비서관	고위공무원	송인배	남	2018.07.02	
7	자치발전비서관	고위공무원	민형배	남	2018.08.07	
8	홍보기획비서관	고위공무원	유민영	남	2018.08.16	
9	대변인	고위공무원	김의겸	남	2018.02.08	
10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위공무원	정혜승	여	2018.08.01	
11	공직기강비서관	고위공무원	최강욱	남	2018.09.07	
12	시민참여비서관	고위공무원	정현곤	남	2018.08.07	
13	사회조정비서관	고위공무원	강문대	남	2018.08.07	
14	제도개혁비서관	고위공무원	김우영	남	2018.08.07	
15	인사비서관	고위공무원	김봉준	남	2018.08.16	
16	재정기획관	고위공무원	박종규	남	2018.08.01	
17	정책조정비서관	고위공무원	김영배	남	2018.08.07	
18	자영업비서관	고위공무원	인태연	남	2018.08.08	
19	산업정책비서관	고위공무원	강성천	남	2018.10.10	
20	통상비서관	고위공무원	박진규	남	2018.10.31	
21	농해수비서관	고위공무원	최재관	남	2018.06.18	
22	교육비서관	고위공무원	이광호	남	2018.09.07	
23	문화비서관	고위공무원	남요원	남	2018.08.16	
24	여성가족비서관	고위공무원	엄규숙	여	2018.04.12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임 종 석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6, 17대 국회의원 	
장 하 성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 위원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 병 도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윤 영 찬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 • 네이버 부사장 • NHN 대외협력담당 이사 •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조 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용 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조현욱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정태호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19대 선대위 정책상황실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무비서관 • 국회의원 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수현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원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임 종 석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6, 17대 국회의원 	
장 하 성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 위원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 병 도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윤 영 찬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 • 네이버 부사장 • NHN 대외협력담당 이사 •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조 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용 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조현욱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정태호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19대 선대위 정책상황실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무비서관 • 국회의원 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수현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원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28. 2018.1월 이후 대통령 훈령 현황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14시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주재 회의의 발언요지 및 조치내역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주요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대통령 지시사항 해당부처 전달 경로

- ☐ 대통령지시 사항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자유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며(관리지침 제3조 및 제4조)
- 국무조정실장은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에 전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리지침 제6조)
-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각 부처 보고사항 대통령 전달 경로

- 각 부처 보고사항 중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의 추진 실적 등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하며(관리지침 제18조)
-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소관지시사항의 추진이 완료되었을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종료승인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19조)
-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전문**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수행한 해당 부처의 소관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서 영 교 위 원

1. 최근 5년간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및 인원, 대상자 명단 일체
2. 역대 정부별 특별사면 횟수 및 인원 등

☐ 요구하신 자료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3. 최근 5년간 대통령실에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현황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30.기준)
총등록건수	30,286	32,483	29,433	28,869	31,831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현황 및 결과

- ☐ 2017년 이전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 목적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감사기간 : 2018. 3. 12. ~ 3. 28.
 - 감사결과 보고서 : 별첨

5. 최근 5년간 장애인,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고용현황 및 업무 내용, 수당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법정권고	고용실적	비고
2017년	1명 (2.9%)	2명 (3.2%)	
2018년	1명 (2.9%)	4명 (6.0%)	

※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별도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최근 5년간 현재까지 대통령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통·번역 등 5개 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6명) 채용을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청와대 직원 훈장, 포상, 표장 내역 (전,현직 일체)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성별현황

구분	기준	계	남	여	비고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2017. 12.	50	41(82%)	9(18%)	
	2018. 10.	52	44(85%)	8(15%)	
전직원	2017. 12.	421	302(72%)	119(28%)	
	2018. 10.	428	309(72%)	119(28%)	

9.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자체 징계현황(소속, 성명, 직급, 범죄명, 처분, 징계현황 자세히)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건, 처분결과 통보 10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범죄 관련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 일 종 위 원

1. 부처 업무보고서

☐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별첨합니다.

2. 부처 예산현황 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별첨합니다.

* 별첨 :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

3. 2015 ~ 현재까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 이전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별첨합니다.

* 별첨 : 2017년도 예산 설명자료.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

4. 2015년~현재까지 결산사업 설명자료

- ☐ 2015회계연도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016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사업 설명자료는 <별첨>과 같음

5.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6.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8.3.12. ~ 3.28.)

지적사항	조치결과
<p>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p> <p>○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p>
<p>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p> <p>○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p>

※ 2017. 5. 10.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7. 2015년~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제2항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는 해당사항 없음

(지난 정부는 관련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9. 2015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일체

- 과거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5월 정부 출범 후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액 (백만원)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1.1~12.15	9.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수의	11.8~12.2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수의	12.1~12.30	9.2
4	2018년 정부 기조 및 정부 중점과제 방향 연구	수의	12.5~12.30	9.2

〈2018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액 (백만원)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쟁	5.3~8.2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6.21~9.20	18.99
3	평화 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수의	7.6~11.5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 분석	수의	7.3~10.2	9.5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수의	10.15~12.31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수의	10.17~12.16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수의	10.17~12.16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수의	10.17~12.16	9.0
9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수의	10.23~12.22	9.5

- 수행기관명 등 세부사항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내부 참고자료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5년~ 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 조사 리스트

- ☐ 대통령비서실에서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30.기준)
총등록건수	29,433	28,869	31,831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2. 2015~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 소송	9건	진행 중
헌재 소송	5건	진행 중
민사 소송	7건	진행 중

13.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밀·대외비 문서의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은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5~현재까지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2015년~현재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장애인	12명	15명	

-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직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국가유공자	4명	6명	

16. 2015년~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 2015년~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8. 2015년~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건, 처분결과 통보 10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 2015~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 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 9월말까지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계약 현황 >

(’18.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용역 내역	계약금액*
2017년(5월 이후)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71건	9,685
2018년(9월말)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68건	7,223

* 계약서 기준 / 해약, 배상 또는 보상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국내·국외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22. 인사 복리 관련 내규 (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2014년 이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취업 현황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참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및 취업이력 공시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직원 퇴직과 관련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5년~현재까지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군, 경찰, 외무공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2015년~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 국정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26.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체적으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2018년도 3월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은 디브레인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전체를 사전 검토한 후 부정사용 의심이 되는 표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등 지적사항은 없었음

※ 지난 정부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27. 2015년~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 2015년~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 2015~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 관리

30. 2015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해외출장, 교육파견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비정규직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32.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연도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3. 2015년~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 (입사일자, 퇴직일자, 방법, 경력, 직위, 직급 및 연봉 기재)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통·번역 등 5개 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6명) 채용을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4. 2015~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 2015년~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5월 10일 이후 대통령 공개일정 중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행사명
2017-06-16	제주 관광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2017-06-26	전직 주 미국대사 초청 간담회
2017-09-27	제18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017-10-28	세계한상대회 주요참석자 간담회
2017-12-06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2017-12-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2017-12-27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및 오찬간담회
2018-01-07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간담회
2018-01-22	규제혁신토론회
2018-02-02	미래차 산업 간담회
2018-02-12	울산 과학기술원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
2018-02-22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2018-04-04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2018-04-12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날짜	행사명
2018-04-19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
2018-09-12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
2018-09-13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

36. 2015년~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07년 ~ 2017년 4월까지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37. 2015년 ~ 현재까지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 복리후생비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년 415, '16년 425, '17년 448, '18년 448백만원

38. 2015년~현재까지 직원 승진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2015년~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 2015년~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1부. 끝.

손 금 주 위 원

1. 각 실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2) 법규(규정)집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현재 각 실의 조직 관련

- (1) 조직도 제출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 (2) 본부 및 산하실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 (3) 각 실의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 (기능직, 비정규직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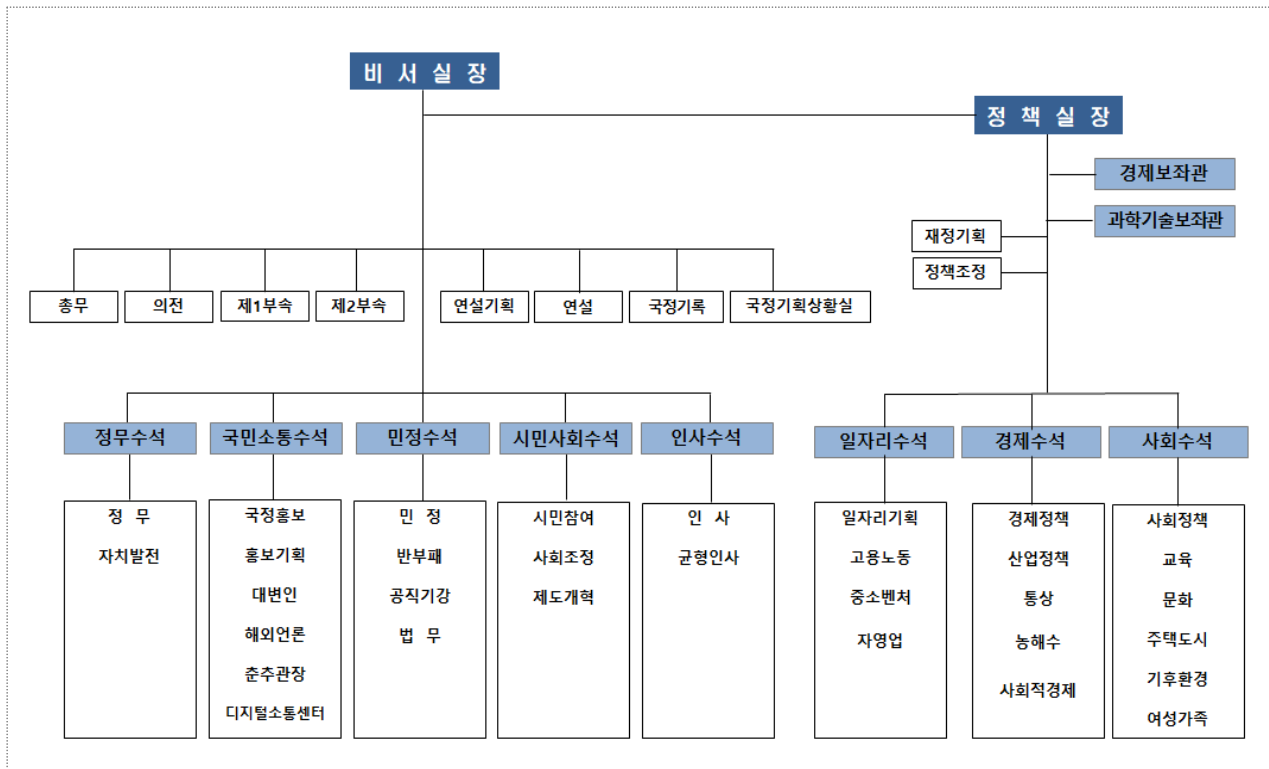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주요 직위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9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 자리 수 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박진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3.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상황 향후 추진 계획

-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현황, 향후 추진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 정부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를 별첨합니다.

4.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현황 별첨합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에 관한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 감사근거 규정, 감사일자, 지적사항, 처분종류, 시정조치내용 등 포함
-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원 감사결과에 해당사항 있을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일체 포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년 10월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 감사일자, 지적사항, 처분종류, 시정조치 내용 등 포함
-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8.3.12. ~ 3.28.)

- 감사결과 보고서 : 별첨

지적사항	조치결과
<p>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p> <p>○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익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p>
<p>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p> <p>○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p>

※ 2017. 5. 10.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비서관급 이상과 관련하여

-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비위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실(내·외부) 및 사정실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실장의 조치 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 (3) 년도별, 각 건별 비위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비위 관련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8. 최근 5년간 비서관급 이상의 연도별 국외 출장현황

- 연도별 국외 출장 건수
- 각 건별 방문기간, 방문국가, 참가자(직위, 소속), 방문 목적, 방문 내용 및 성과 등 결과보고서, 상세 일정, 출장비(예산액, 실 집행액) 등 포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총무)

- 목적 및 취지, 근거, 기간, 국가, 참가자(직위, 소속), 교육 내용, 예산 등 포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 작성시 소송비용, 변호비용, 변호비용 세목 등 출처 등 예산 사용 내역(계약서상 지출 예정비용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소송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 소송	9건	진행 중
헌재 소송	5건	진행 중
민사 소송	7건	진행 중

11. 현재 각 실의 업무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현재 각 실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위원명단, 회의 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 ☐ 대통령비서실 내부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회의개최 일시 및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등 세부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장	'17. 9.12 (2년)	정해구	·現 성공회대학교 교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
위원	'17.12.15 (2년)	고석규	·現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고유환	·現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현) ·민주평통 기획조정위원장(현)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장(현)
위원	'17.12.15 (2년)	곽병창	·現 우석대학교 교수 ·전주시 전주정신위원회 위원(현)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전북 문화예술진흥위원
위원	'17.12.15 (2년)	곽채기	·現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행정대학원장(현) ·전남대학교 교수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위원	'17.12.15 (2년)	곽현근	·現 대전대학교 교수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현) ·국민권익위 자체평가 위원(현)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현)
위원	'17.12.15 (2년)	권혜원	·現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울시 다산콜재단 비상근이사(현)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감사(현)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김경미	·現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재무위원장(현) ·대한암학회 재무이사(현) ·대한병리학회 교육수련이사
위원	'17.12.15 (2년)	김경희	·現 중앙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방송위 보도교양 심의위원
위원	'17.12.15 (2년)	김국진	·現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김남준	·現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현) ·국민성장 검찰 개혁단장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05~06)
위원	'17.12.15 (2년)	김명환	·現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시카고대 초빙교수
위원	'17.12.15 (2년)	김성경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현) ·싱가폴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성공회대학교 HK 연구교수
위원	'17.12.15 (2년)	김수연	·現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현)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연명	·現 중앙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위원	'17.12.15 (2년)	김연순	·現 (협)행복증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법무법인 대양변호사
위원	'17.12.15 (2년)	김용기	·現 아주대학교 교수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추진단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위원	'17.12.15 (2년)	김용현	·現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우철	·現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청와대 재정기획관실 정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유찬	·現 홍익대학교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KPMG Frankfurt 시니어 컨설턴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은경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외대 교수협의 회장(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현)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현)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김인회	·現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현)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위원	'17.12.15 (2년)	김재훈	·現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한국사회경제학회 부회장(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지역분과 간사
위원	'17.12.15 (2년)	김좌관	·現 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 ·국민성장 환경에너지 팀장 ·(사)인본사회연구소 소장
위원	'17.12.15 (2년)	김준형	·現 한동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외교분과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통 상임위원(현)
위원	'17.12.15 (2년)	김지미	·現 김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법무법인 대양 변호사
위원	'17.12.15 (2년)	김지윤	·現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후 연구원, 몬트리올대
위원	'17.12.15 (2년)	김창룡	·現 인재대학교 교수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위원	'17.12.15 (2년)	김태만	·現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럼지식공간 공동대표(현) ·문화예술협동조합 플랜비 이사장(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위원(현)
위원	'17.12.15 (2년)	김흥규	·現 아주대학교 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5 (2년)	류건우	·現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
위원	'17.12.15 (2년)	문성종	·現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현)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인사위원(현) ·제주도 성과평가위원(현)
위원	'17.12.15 (2년)	문장렬	·現 국방대학교 교수 ·NSC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담당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육군3사관학교 교수
위원	'17.12.15 (2년)	박경환	·現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지리학회 부회장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담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	'17.12.15 (2년)	박진도	·現 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학교 명예교수(현) ·충남대학교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박진희	·現 동국대학교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현)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전임연구원
위원	'17.12.15 (2년)	박진희	·現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현) ·군산의료원 이사(현) ·우석대학교 간호학과장
위원	'17.12.15 (2년)	박찬희	·現 중앙대학교 교수 ·Deloitte Consulting 자문역 ·국가비전2030 기획 ·대우그룹 회장보좌역
위원	'17.12.15 (2년)	배기찬	·現 국가안전전략연구원 고문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위원	'17.12.15 (2년)	서유경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NGO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현) ·전국여교수연합회 부회장 겸 서울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정치사상분과위원장
위원	'17.12.15 (2년)	서형원	·現 청암대학교 총장 ·주크로아티아 대사 ·주일본 공사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국장
위원	'17.12.15 (2년)	석재은	·現 한림대학교 교수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
위원	'17.12.15 (2년)	성정현	·現 특허법인 총정 대표변리사 ·KAIST 지식산학대학원 겸직교수(현) ·동국대 의료기기산업대학원 겸임교수(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현)
위원	'17.12.15 (2년)	소순창	·現 건국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현)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손은일	·現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경남 6차산업지원센터 협의회 회장(현) ·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공동대표(현) ·전국혁신도시포럼 경남대표(현)
위원	'17.12.15 (2년)	심미선	·現 순천대학교 교수 ·광고자율심의위원(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현)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안성호	·現 대전대학교 교수 ·행자부 자치분권전략회의 공동위원장 ·국민성장위원회 분권균형발전분과 위원장
위원	'17.12.15 (2년)	안종주	·現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겨레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성장 안전사회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위원	'17.12.15 (2년)	양무진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현) ·민주평통 상임위원(현)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오테규	·現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TF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자문위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관훈클럽 총무
위원	'17.12.15 (2년)	오현석	·現 (취지역)아카데미 대표 ·(사)농정연구센터 이사(현) ·(사)한국농어촌개발전문기관협회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FTA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원희연	·現 부산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성대학교 교수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부산광역시 물류정책보좌관
위원	'17.12.15 (2년)	유남영	·現 유남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윤순진	·現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현)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위원	'17.12.15 (2년)	윤황	·現 선문대학교 교수 ·국립경천대학 연구관 ·정책공간 국민성장연구소 동포이민특위 간사 ·중부미래포럼 상임대표(현)
위원	'17.12.15 (2년)	이건범	·現 한신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기획처장, 교무처장 ·금융위원장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이건세	·現 건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실장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위원	'17.12.15 (2년)	이미경	·現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현)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위원	'17.12.15 (2년)	이소영	·現 대구대학교 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장(현) ·대한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현)
위원	'17.12.15 (2년)	이윤석	·現 계명대학교 교수 ·행자부 인구감소지역발전자문단 위원(현)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현) ·게이오대학 겸임교수
위원	'17.12.15 (2년)	이재원	·現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서비스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이진	·現 건양대학교 교수 ·건양대 평생교육대학원장(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현)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이한주	·現 가천대학교 교수 ·가천대 부총장(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 ·한국경제사회학회 고문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임채원	·現 경희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소 연구원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임춘택	·現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국민성장 과학기술 간사 ·KAIST 교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위원	'17.12.15 (2년)	장준호	·現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장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현) ·미국 UC SanDiego 초빙교수
위원	'17.12.15 (2년)	정기환	·現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현) ·국제카톨릭농민운동연맹(FIMARC) 회장
위원	'17.12.15 (2년)	정대영	·現 송원경제연구소 소장 ·우리슬문학회 이사장(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금융팀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위원	'17.12.15 (2년)	정동일	·現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림대 교수 ·코넬대 방문교수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정상호	·現 서원대학교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회장(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현) ·한국NGO학회 이사(현)
위원	'17.12.15 (2년)	정태호	·現 경희대학교 교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정희정	·現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문화일보 기자
위원	'17.12.15 (2년)	조원희	·現 국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위원	'17.12.15 (2년)	조의연	·現 동국대학교 교수 ·새로운 불교포럼 고문 ·동국대학교 경영관리실장 ·한국 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조재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문재인대통령 선대위 기획단장 ·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위원	'17.12.15 (2년)	조흥식	·現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정책학회 회장(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진시원	·現 부산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7.12.15 (2년)	최성숙	·現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부회장(현)
위원	'17.12.15 (2년)	최현선	·現 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와 커뮤니티 연구소장(현)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국정관리학회 상임이사 및 위원장(현) ·University of North Florida 교수
위원	'17.12.15 (2년)	허문경	·現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기획운영위원장(현)
위원	'18.1.10 (2년)	김정인	·現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현)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위원장(현) ·정의기억재단 이사(현)
위원	'18.1.10 (2년)	박복영	·現 경희대학교 부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운영위원장
위원	'18.1.10 (2년)	박준식	·現 한림대학교 교수 ·한림대학교 비전협력처장(현) ·지역사회학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위원	'18.1.10 (2년)	서복경	·現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위원	'18.1.10 (2년)	소준노	·現 우석대학교 교수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현) ·전북교수연합연구회 고문(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국민참여센터장
위원	'18.1.10 (2년)	어미정	·現 경기도시공사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현)
위원	'18.1.10 (2년)	오유석	·現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비판사회학회 회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국회 선거제도개혁자문위원
위원	'18.1.10 (2년)	이석범	·現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현) ·문재인후보 법률,안보,정책특보
위원	'18.1.10 (2년)	이장원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 조직위원장(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위원	'18.1.10 (2년)	임지봉	·現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위원	'18.1.10 (2년)	조영철	·現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위원	'18.1.10 (2년)	조정아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	'18.1.10 (2년)	최경숙	·現 골든씨클재단 이사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선대위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위원	'18.1.10 (2년)	최민희	·現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방송위 상근부위원장
위원	'18.1.10 (2년)	홍선미	·現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총괄위원회 평가위원(현)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위원(현)

o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 주요업무 : 국정과제 이행 추진 및 국가중장기 정책 개발
- . 설 립 일 : '17.9.5
- . 근거법령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자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공석)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위촉직 위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일자리 정책 기획 조정

· 설 립 일 : '17.5.16

- 근거법령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2017.10.10.(1년)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CS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파트너 첫눈 CEO
위원	"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 공동위원장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	"	김흥수	현대자동차 상품기획3실장 한국자동차공학회 정회원 현대차 제품신뢰성확보실장
"	"	문용식	(사)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주)나우콤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주)한국출판정보통신 이사
"	"	박찬희	SKT 커뮤니케이션플랫폼 본부장 SKT 상품개발 본부장 NHN 비즈니스플랫폼 센터장
"	"	백승욱	루닛 대표 現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초빙교수 KAIST 전자공학 박사
"	"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특임교수 지능정보포럼, 인공지능산업협의회 회장
"	"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오픈넷 이사 다음커뮤니케이션 글로벌부문장
"	"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SK 커뮤니케이션즈 CE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	"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장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정회원
"	"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
"	"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산업부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장
"	"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과기정통부 창의연구단장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전문위원
"	"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상임이사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장

"	"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IoT SW보안 국제공동연구센터장 안랩 최고기술책임자(CTO)
"	"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장 정보통신 미래모임 회장
"	"	한재권	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 이사 한국로봇학회 조직위원
"	"	강수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정회원 항우연 여성과학기술인 책임담당관
"	"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 한국도시지리학회 이사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자문위원회 간사
"	" (당연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LG CNS 사업지원본부장(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 연구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	"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대응체계 구축

· 설 립 일 : '17.8.22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임기)	성명	주요 이력
위원장	2017.8.16. (2년)	송재 호	現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06~'08)
위원	2017.10.26 (2년)	강태 호	現 동국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사)경북정책연구원 원장
위원	2017.10.26 (2년)	강현수	現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균형위 제도운영 전문위원('03~'06)
위원	2017.10.26 (2년)	김영배	現 서울시 성북구청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위원	2017.10.26(2년)	김영화	現 대구참여연대 고문, 경북대학교 교수 現 대구시 여성사회교육원 공동대표 대구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2017.10.26(2년)	김향자	現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시 미래문화전략TF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자문위원
위원	2017.10.26(2년)	나종만	現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05~'07)
위원	2017.10.26(2년)	류장수	現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지역위 교육인재양성 전문위원('16~'17)
위원	2017.10.26(2년)	류한호	現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광주대학교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위원	2017.10.26(2년)	박소영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위원	2017.10.26(2년)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균형위 수도권관리전문위원('06~'08)
위원	2017.10.26(2년)	이경미	現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 지역위 평가자문단 위원('14,'15,'17)
위원	2017.10.26(2년)	이기원	現 한림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강원랜드 하이원희망재단 이사 균형위, 지역위 평가자문단 위원('05~)
위원	2017.10.26(2년)	이은정	現 나주골 참살이농장 대표 나주시·화순군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 실장 나주시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위원	2017.10.26(2년)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기획실장
위원	2017.10.26(2년)	이태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역공약TF팀장 (재)한국보건복지개발원 원장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원	2017.10.26(2년)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원 소장 국토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2017.10.26(2년)	한대희	<사직절차 진행중>
위원	2017.10.26(2년)	한승희	㈜한국자금중개 사장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0~'11)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
- 설 립 일 : '03.4.7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자치분권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 명	주요이력
위원장	‘18.1.23 (2년)	정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 원	"	김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위 원	"	김중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 · [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 [현]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 행안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위 원	"	안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울산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주임교수 · [현]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 한국지방정부학회 석외위원
위 원	"	이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건국대 충주 글로벌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 [현]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 원	"	김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북보건과학대 복지행정과 교수 · [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자문위원 · [현] 충북 인사위원회 위원
위 원	"	최윤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 · 고려대 경상대학장 경영정보대학원장 · 국회의원 자문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위 원	"	이재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대 명예교수 · 경기대 부총장, 대학원장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위 원	"	이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구청장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위 원	"	최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우석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정책실장 · 박원순 시장 희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 원	"	육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위 원	"	안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우수입법의원선정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 원	"	김광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
위 원	"	조승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 명	주요이력
위 원	‘18.1.23 (2년)	강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
위 원	"	신윤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강원도 규제개혁위원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1기,2기)
위 원	"	최승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인행정학회 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 원	"	양선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위 원	"	김윤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도 시흥시장 ·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위 원	"	윤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현] 지방분권 리더스클럽 공동대표
위 원	"	조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 원	"	박승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 공동대표
위 원	"	최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 [현]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 제15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 원	"	김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정발전연구위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지방자치발전계획 수립

· 설 립 일 : '13.9

· 근거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부위원장	'17.09.29 (2년)	김상희	- 국회(19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지속가능발전위 위원장(참여정부)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위원	'17.09.29 (2년)	장윤숙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 -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 셀트리온 전무
위원	'17.12.18 (2년)	김창엽	- 現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現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위원	'17.12.18 (2년)	김희삼	- 現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 現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위원	'17.12.18 (2년)	박신영	- 現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주택회 회장
위원	'17.12.18 (2년)	소라미	- 現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8 (2년)	양난주	- 現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現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위원장 -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윤홍식	- 現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 시민복지위원회 돌봄분과장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위원	'17.12.18 (2년)	이원재	- 現 LAB2050 대표 - (재)여시재 기획이사 - 희망제작소 소장 -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위원	'17.12.18 (2년)	임윤옥	- 現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現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 現 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장지연	-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現 한국사회보장학회 부회장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정영애	- 現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現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한국여성학회 회장
위원	'17.12.18 (2년)	제현주	- 現 (주)엘로우독 이사 - 現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협동조합 롤링다이스 대표/이사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	'17.12.18 (2년)	조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CEO) & 콘텐츠 총괄 디렉터 (CCD) -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미디어&여성 개척자 부문 선정 : 2017 미디어, 여성 개척자 부문 30인 - 한국일보 2030 세상보기 칼럼니스트
위원	'17.12.18 (2년)	김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現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3선) -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4선)
위원	'17.12.18 (2년)	최종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일자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원	'17.12.26 (2년)	김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조정실장-에너지자원실장
위원	'17.09.29 (2년)	김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고용노동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김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국토교통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정현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여성가족부 장관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원	'17.09.29 (2년)	김동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위원	'17.09.29 (2년)	김부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행정안전부 장관 - 제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김상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제14대, 15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위원	'17.09.29 (2년)	박능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보건복지부 장관 - 제24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제17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설 립 일 : '05.9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o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외 당연직 5명*, 민간위원 20명

*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o 위원장 및 민간위원 명단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공석	
위원	‘17.12.7 (2년)	강윤희	英 글라스고대 러시아지역학 박사 경제발전공유사업 러시아 정책자문 국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권순엽	美 콜럼비아 법대 J.D. SK주식회사 정보통신실장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위원	‘17.12.7 (2년)	권영경	연세대 경제학 박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위원	‘17.12.7 (2년)	김광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
위원	‘17.12.7 (2년)	김민기	중앙대 의학박사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위원	‘17.12.7 (2년)	김태유	美 콜로라도대 경제학박사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직명대사
위원	‘17.12.7 (2년)	김효선	美 아리조나대 자원경제학 박사 UN개발국 자원탐사 담당관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위원	‘17.12.7 (2년)	박미옥	美 로드아일랜드대 이학박사(화학) 한국해양학회 부회장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회 위원
위원	‘17.12.7 (2년)	박종환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 경찰종합학교 교장 충북지방경찰청장
위원	‘17.12.7 (2년)	성원용	러 성페테르부르크대 경제학 박사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안병민	日 쓰쿠바대 행정학 박사 한국교통연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연구소장 남-북-러 철도전문가회담 대표
위원	‘17.12.7 (2년)	이건기	한양대 건축공학 석사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위원	‘17.12.7 (2년)	이재영	러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 유라시아학회 회장 Valdai Club 및 Astana Club Expert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	‘17.12.7 (2년)	이해정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조민행	고려대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원	‘17.12.7 (2년)	조봉현	동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조영남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방문학자 북경대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위원	‘17.12.7 (2년)	조정훈	美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여시재 부원장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위원	‘17.12.7 (2년)	최아진	美 듀크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장
위원	‘17.12.7 (2년)	황진회	서강대 경영학 박사 수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설 립 일 : ‘17.8.21
- 근거법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8.25)

□ 국가교육회의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이름	주요이력
의장	‘17.10.10~’18.10.9 (1년)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경기도교육감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동연	한국장학재단 경영고문 아주대학교 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박능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영주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사무처 총괄차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정현백	서울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무현재단 이사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환경부 차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이재정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 경기도교육감 참여네트워크 대표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장호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단국대학교 총장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단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강경숙	제4차산업혁명 스마트러닝 미래융합교육학회 상임이사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상임이사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이사(부회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강남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권호열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정책포럼 위원장 교육부 대학정보화정책자문단 정보화기반분과위원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김대현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교무처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이름	주요이력
위원	'17.12.12~'18.12.11 (1년)	김정안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서울 은평고등학교 교사 서울여자고등학교 교사
위원	'17.12.12~'18.12.11 (1년)	김진경	중국 소주대학 초빙교수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전동중학교 교사 양정고등학교 교사
위원	'17.12.12~'18.12.11 (1년)	박명림	한국인권재단 이사 한국통일포럼/한반도포럼 연구이사 중국 길림대학교 해외객좌교수
위원	'17.12.12~'18.12.11 (1년)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장 세종시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 세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	'17.12.12~'18.12.11 (1년)	장옥선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경기도 수업분석교과교육연구회 회장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수영초등학교 교장
위원	'17.12.12~'18.12.11 (1년)	황선준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련 자문 및 정책 제안
- 설 립 일 : '17.9
- 근거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3. 현재 각실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 (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 부서, 처리결과)

-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총 민원 등록 건수는 26,038건이며,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어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4. 각 실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내역

□ '18년 9월말 현재 정부구매카드 보유수량은 290개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정부구매카드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5월 이후)	2018년도 (9월말 기준)	계
정부구매카드 사용액	3,038	3,105	6,143

※ 2017년 4월까지의 내역은 관련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 3년간 각 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 2017. 5. 10. ~ 2018. 9. 30.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연간 총 예산액	집행액
'17년(5. 10. ~ 12. 31.)	업무지원비(300)-특수활동비(230)	12,488	5,850
'18년(1. 1. ~ 10. 14.)	업무지원비(300)-특수활동비(230)	9,650	7,300

※ 2017년 4월까지의 내역은 관련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 현 정부 출범 이후를 대상으로 작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 각 실별, 비서관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연도별, 월별)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영수증(연도별, 월별)

□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1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3)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4)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감사원 또는 상부실의 내부 지침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4. 업무추진비)의 주요 내용

- 클린카드 사용 및 의무제한업종
- 법정공휴일, 23시 이후, 관할근무지 외 사용 특례
-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건당 50만원 이상)
- 사업추진비(240-01), 관서업무추진비(240-02) 적용범위 등

1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 각 실별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실의 지침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국내·국외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 연도별 각 실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 실적

(3) 연도별, 각 실의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근무인원, 지급인원, 지급일수, 지급금액)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국내·국외 여비는 기관 전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국내·국외 여비 집행 현황

<현 정부 출범 이후>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5월 이후)	예산현액	집행액 (9월말 기준)
국내 여비	453	238	470	370
국외 여비	345	166	350	296
계	798	404	840	666

1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4) 연도별 각 실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건별 세부내역 (출장보고서 첨부)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국내·국외 여비는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출장명, 출장일시, 출장자, 출장지, 출장보고서 등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5) 연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 감사, 사정실의
적발 내역 (인원, 금액, 조치내역)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18. 최근 3년간 각 실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결재 문건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붙임 결재문건 목록 1부. 끝.

19. 김영란법 관련

- (1) 소속원이 김영란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받고 있는 내역

☐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기 구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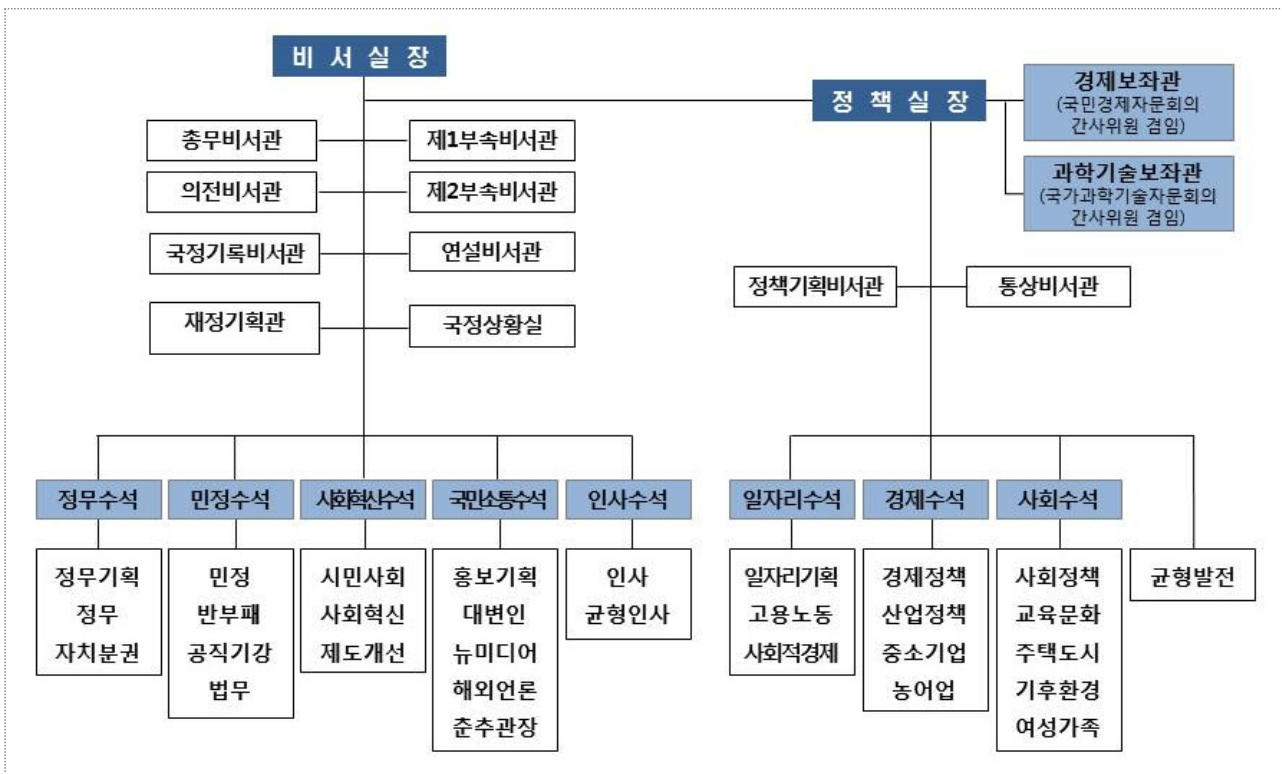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
(조직, 정원, 예산 등, 개편있을 때마다 낱자와 함께 새로운
조직, 정원 명기 요망)

- ☐ 이전 정부들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직, 정원)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17.5.10.기준)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1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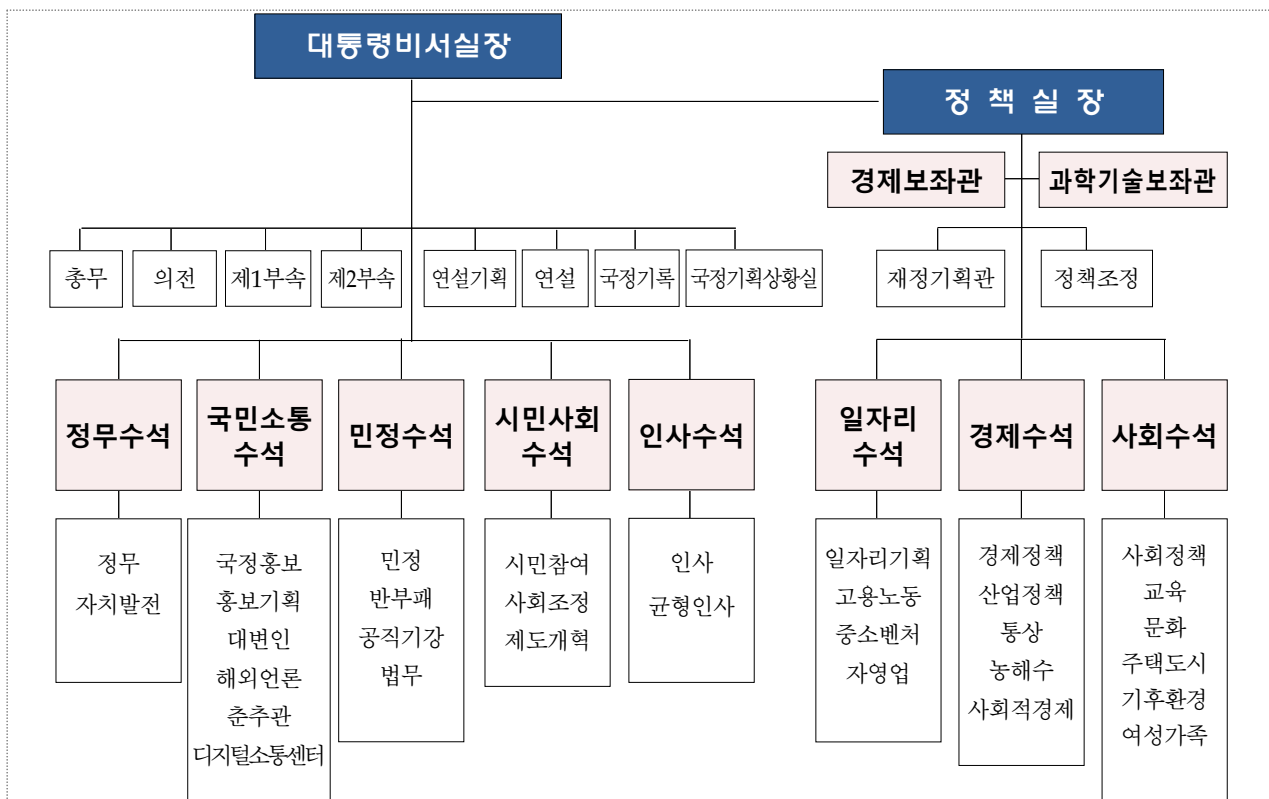
(2017. 12월말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0	236	155
현 원	421	12	38	222	149
결 원	△22	-	△2	△14	△6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18.8.1.기준)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9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 (예산) 현재 예·결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억원)

	‘14	‘15	‘16	‘17	‘18
예산액	841	887	890	881	899

2. 기관에서 운영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 ☐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
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징계내역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결과,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명기할 것)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발신처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1부. 끝.

5.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위 요구자료 관련,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8.3.12. ~ 3.28.)

지적사항	조치결과
<p>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p> <p>○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익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p>
<p>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p> <p>○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2018년 실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p>	<p>○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p>

※ 2017. 5. 10.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

6.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1) 법률자문 용역내용(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 2) 연구용역 내역(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용역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등)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률자문용역내역은 2018년 10월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7.5월 정부 출범 후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액 (백만원)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수의	11.1~12.15	9.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수의	11.8~12.22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수의	12.1~12.30	9.2
4	2018년 정부 기조 및 정부 중점과제 방향 연구	수의	12.5~12.30	9.2

〈2018년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 방법	연구 기간	계약액 (백만원)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쟁	5.3~8.2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수의	6.21~9.20	18.99
3	평화 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수의	7.6~11.5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 분석	수의	7.3~10.2	9.5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수의	10.15~12.31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수의	10.17~12.16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수의	10.17~12.16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수의	10.17~12.16	9.0
9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수의	10.23~12.22	9.5

- 수행기관명 등 세부사항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내부 참고자료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현황 별첨합니다.

8. 최근 3년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지침하달 내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정보공개처리 현황 1부. 끝.

12.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품 구매내역(구매 품목, 구매 금액)

- 2017년 5월 10일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5.10. 이후 구매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주요물품(비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물품 취득 전체 현황을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물품 취득 현황 >

(‘18. 9월말기준)

구 분	품 종 별 세 부 품 목	취득액 (백만원)
사무용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서버, 소프트웨어 등	1,246
산업기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난방비 등	916
사무용집기	책상, 작업용의자, 칸막이, 파일서랍, 탁자 등	72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차량 및 부속품, 냉장냉동 겸용장치 등	409
전기통신기기	방화벽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123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받침대 등 부속품	94
기타잡기기	텔레비전, 선풍기, 속기록용 비품, 마이크 등	105
기계요소, 측정기기 등	잔디청소기, 주유기, 계수기 등	62
계		3,027

※ 주요물품 : 구입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13.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양 수 위 원

1. 기관 기본 현황 자료

- 조직, 업무, 역할, 각 기관의 소관 법령·지침·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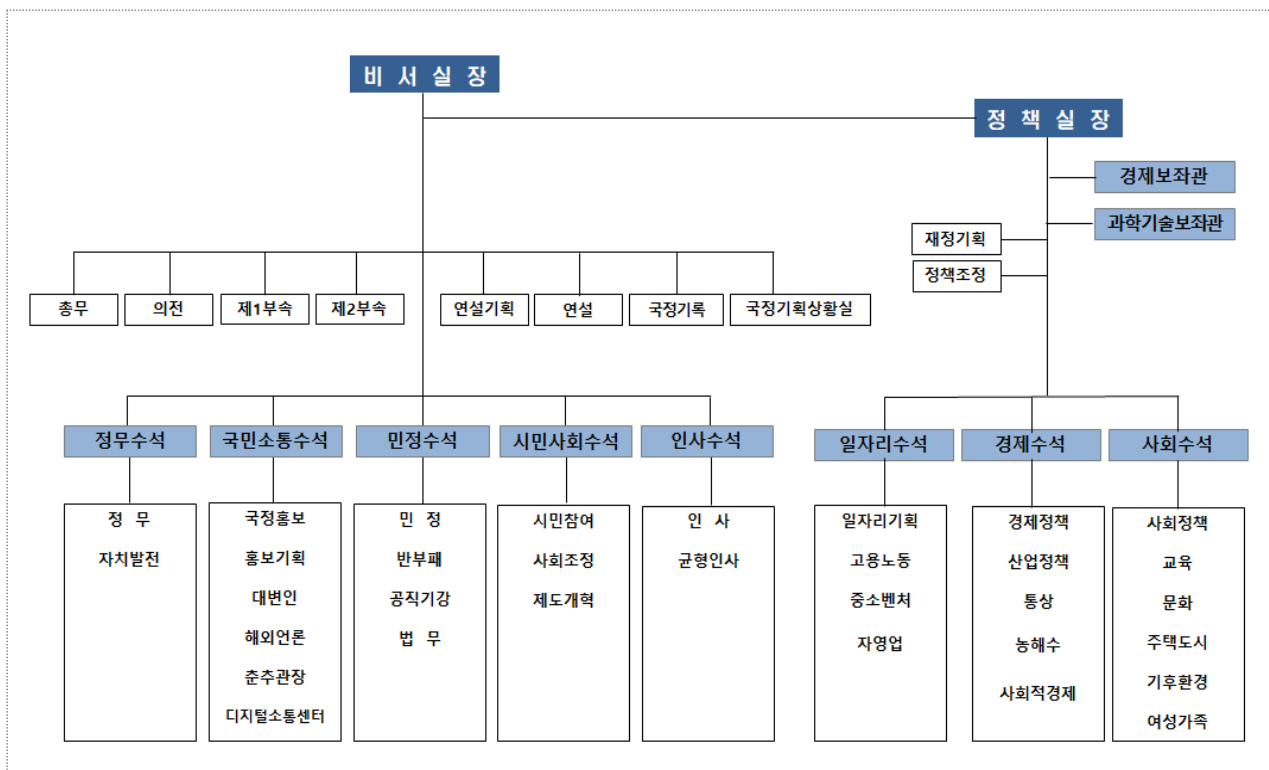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9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	--------------------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 및 제도개선 업무 ○ 균형 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지역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해양, 정보통신산업, 농림축산업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업무 ○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업무
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주택·도시 관련 정책 및 환경·기후변화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2. 대통령비서실 각 수석급 이상, 국가안보실 차장급 이상,
대통령경호처 각 실장급 이상 명단 및 학력, 주요 경력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인적사항
-----------	--------------------------------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임 종 석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6, 17대 국회의원 	
장 하 성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 위원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 병 도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윤 영 찬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 • 네이버 부사장 • NHN 대외협력담당 이사 •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조 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용 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조현욱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정태호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19대 선대위 정책상황실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무비서관 • 국회의원 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수현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원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3.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 2017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 2017년 이전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현 정부에서 확인되는 사항(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은 아래와 같음

○ 2018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18. 3. 12. ~ 3. 28.)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 매점·카페 등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매점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완료('18. 7월)
제목: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 26점에 대하여 실물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차기 가격평가 주기(19년)에 실물감정 실시, 재산가액 재산정, 등급 재분류 실시 예정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년 6월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6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용역업체, 비정규직 현황자료 일체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 공문 수·발신 목록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공문 수·발신 목록 일체. 끝.

6.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및 처리현황 목록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9.30.기준)
총등록건수	28,869	31,831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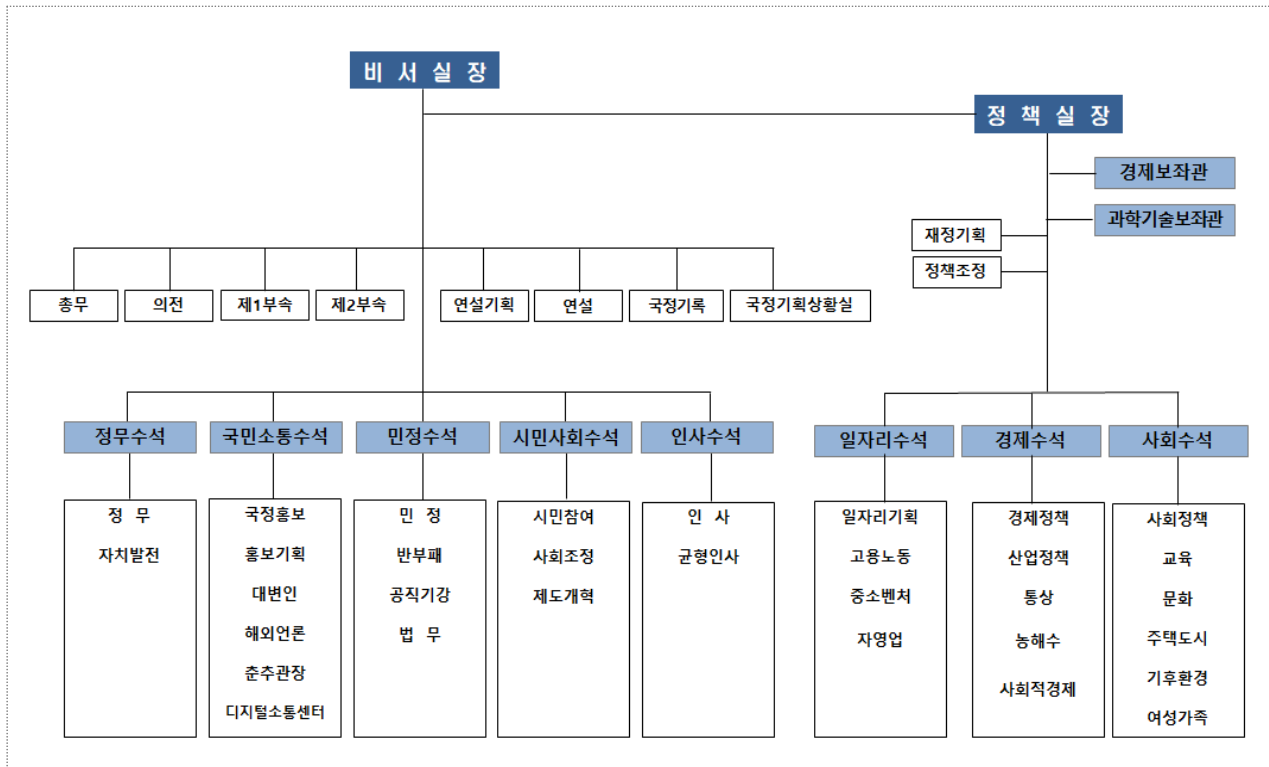
8. 2018년 9월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9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 근로자 고용현황 :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 고용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자리수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박진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9.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기관 직원 징계 및 경찰·검찰 수사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건, 처분결과 통보 10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 병 완 위 원

1. 지난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위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위촉일	비 고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유 홍 준	2018. 1. 23.	

2. 비서실 해당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 국정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지난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서류 제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현황 및 운용관련 계획

- ☐ 각 부처별 TFT 구성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정부출범 후 예비비 집행현황 상세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정부출범 후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목록 1부. 끝.

7. 정부출범 후 폐기 물품 목록

- 2017.5.10. 이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폐기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물품 폐기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물품 중 관리 전환 소요조회, 조달청 무상관리전환 절차를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므로, 폐기물품 전체 현황을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품 현황 >

(‘18. 9월말기준)

구 분	품 종 별 세 부 품 목	금액 (천원)
사무용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서버, 소프트웨어 등	522
산업기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난방비 등	16
사무용집기	책상, 작업용의자, 칸막이, 파일서랍, 탁자 등	370
전기통신기기	방화벽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마이크 등	313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받침대 등 부속품	88
기타잡기기	텔레비전, 선풍기, 자전거, 운동기구 등	153
계		1,462

8. 국정기록비서관실의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수시 열람해 볼 수 있는 핫라인 관련

8-1)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컴퓨터 포함) 설치 현황(일/장소, 사용자 등 기재)

8-2) 동 시스템 설치 소요 예산 및 관련 절차

8-3) 동 시스템 열람 범위

8-4) 동 시스템 사용자의 접속 및 열람 자료 현황

8-5) 동 시스템을 열람하여 출력한 문서 현황(제목별로 기재)

□ 자료열람용 PC는 이미 17대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08. 3월부터 설치·운영되다가 '17. 3월 사용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 열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 대통령기록관에서 '17. 6월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내 PC 1대를 설치·운영하다가 8월 중순 해당 PC를 철거하였습니다.

○ 대통령기록관 직원 1인이 열람을 전담하였으며,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만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열람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받았습니다.

□ 설치부터 운영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전담하였으므로, 소요예산 및 접속·열람 자료 현황 등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임을 말씀 드립니다.

9. 대통령 추천 인사 및 인사별 추천자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 추천자 및 추천이력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10-1. 2017.5.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요구자료 현황 및 제출 현황

10-2. 2017.5.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요구자료 제출 소요기간 (평균 최소 최대 구분)

10-3. 2017.5.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요구자료중 미제출 자료

□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는 총 734건입니다.

○ 다만, 시스템상 기간을 특정한 제출건수나 소요기간에 대한 분석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부출범 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 요청하신 내용은 경호처 소관 사항입니다.

12.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일체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 관리

13. 정부출범 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일시, 참가대상, 안건 회의록 사본 등 일체

□ 현 정부 출범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차수		회의일시	안건	회의자료
1차 협의회		'17. 9. 26	붙임1	붙임1
2차 협의회	1부	'18.4.18	붙임2	붙임2
	2부		붙임3	붙임3

○ 참석자 내역

차수	참석자
1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장), •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사회혁신수석, 정무수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협의회 위원) •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협의회 배석위원)
2차 협의회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자와 같음.
2차 협의회 (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반부패정책협의회 위원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원 <p>(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원)</p> <p><경제>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직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감사협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협의회 회장,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언론·학계> 여성신문 사장, 한국방송협회 회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공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공익> 내부자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p>

- 회의록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주요정책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붙임2>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붙임3>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14. 정부출범 후 월별, 실별, 직급별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 정부출범 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7년(정부출범 이후)	12,488	5,850 [*]	3,711	663 ^{**}
'18년(9월말 기준)	9,650	7,300	1,521	995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8,812백만원임

^{**} '17년도 연간 총 집행액은 1,665백만원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정부출범 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정부출범(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16.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에 대해서는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7. 정부출범 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소속 이름, 직급, 주요 경력, 담당업무)

-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국정협력을 위하여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원 전입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정부출범 후 대통령 훈령 현황

-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정부출범 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 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기타 국가주요결정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정부출범 후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21.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목록 1부. 끝.

22. 비서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안전, 일자, 참석자 회의 결과

- ☐ 대통령비서실은 매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수석실도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정부 출범 이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낱짜, 안건, 논의결과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낱짜, 안건, 논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정부출범 후 소속 공무원 연월차 사용 실적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7년은 법정연가일수 15일 중 12일(80%),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9일(45%, 9월말 현재)이며, 연가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 정부출범 후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 출범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6. 특별감찰반 구성 운영현황

- ☐ 민정수석실에 15명의 특별감찰반이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과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7. 자체감사결과

-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29. 비서실 정원 및 현원

□ 대통령비서실 정·현원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30.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직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내역(10월 급여기준)

각종 수당 명	인원 및 금액	비 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308명 25,653천원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151명 17,384천원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등 특수근무수당	156명 14,435천원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193명 125,303천원	

31. 소속 직원 복리후생(육아, 출산휴가 사용, 출산격려금, 초과근무수당 등등) 실제 사례 내역

- ☐ (육아·출산휴가) 현정부 출범이후 1명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였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출범 후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은 13건이며, 총 지급금액은 130만원입니다.
- ☐ 2018.10월 기준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액(10월 기준)

구 분	인원 및 지급액	비 고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193명 125,303천원	

32. 비서실 소유 차량 현황, 보험금, 블랙박스 장착여부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공용차량은 총 68대이며, 승용차량 51대, 승합차량 13대, 화물차량 4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018년 계약금액은 19,237,400원입니다.
- 블랙박스는 청와대의 보안 특성을 감안하여 경내 중요 시설물 촬영 등으로 인한 보안 유출 우려가 없는 12대의 차량에 장착·운용하고 있습니다.

33. 소속 직원 형사처벌 현황

- ☐ 선임행정관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4.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현황(장애인 의무고용포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2017. 9. 1일자로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법정권고	고용실적	비고
2017년	1명 (2.9%)	2명 (3.2%)	
2018년	1명 (2.9%)	4명 (6.0%)	

※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5. 정부 출범 후 민원 처리현황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9.30.기준)
	1. 1. ~ 5. 8 (전 정부)	5. 9. ~ 12. 31. (정부 출범 이후)	
총등록건수	3,022	28,809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36. 청와대 청원게시판 운영 및 청원답변 등 처리 일체

- ☐ 상세 청원 및 답변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답변된 청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37. 지난 5년간 소속 직원 비위 및 비리 적발 현황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년 10월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안규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지난 5년간 특별보좌관, 자문위원 현황 (명단, 직책, 직급, 선퇴임 사유, 주요이력, 임용기간, 수당)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위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위촉일	해촉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 정 인	2017. 5. 22.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홍 석 현	2017. 5. 22.	2017. 6. 27.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유 홍 준	2018. 1. 23.	

39. 지난 5년간 외부 강의한 직원 명단, 강의장소, 강의일자, 주제, 대상, 강연료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주요과제」, 「사람중심 경제, 대통령의 경제구상」 등 총 20건의 외부강의 신고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정부혁신방향」, 「한반도 평화와 안보」 등 총 28건의 외부강의 신고가 있었음
-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5급이상 행정관 출신 지역 분포현황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주요 직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출신지역에 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 자리 수 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박진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41. 지난 5년간 연도별 청와대 전산 사고 발생 목록, 사고 내용, 발생일, 발생사유, 처리결과

- ☐ 대통령비서실은 시스템 이중화,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운영으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전산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지난 5년간 전용기 사용내역, 이동장소, 거리, 발생비용, 대통령
탑승여부, 탑승인원

☐ 요청하신 자료는 경호처 소관업무입니다.

43. 지난 5년간 연도별 인턴직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과정, 면접위원명단, 선발자 명단, 선발자 생년월일(기재치 말고 의원실 직접제출)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별도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4. 지난 5년간 정규, 무기계약, 비정규직 인원, 신설채용 퇴직 현황, 평균근속년수 및 지급 임금 규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2017. 9. 1일자로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안전보장,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지난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난 5년간 연도별 4급이상 직원 재산신고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에 대해서는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7. 정부 출범 후 해명,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사 소송현황

☐ 현 정부 출범이후 해당사항 없습니다.

48. 정부 출범 후 순방일시, 순방국가, 순방별 비서실 동행 인원 현황(소속, 이름, 담당 업무)

□ 현 정부 출범 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현황

[2017년]

- 미국 방문 (6.28-7.2)
- 독일 공식방문 및 G20(함부르크) 정상회의 참석 (7.5-10)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러시아 방문 (9.6-7)
-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9.18-22)
-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다낭), 한-ASEAN/ASEAN+3/EAS(마닐라) 정상회의 참석 (11.8-15)
- 중국 국빈방문 (12.13-17)

[2018년]

- 베트남 국빈방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공식방문 (3.22-28)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참석 (5.9)
- 미국 방문 (5.21-24)
- 러시아 국빈 방문 (6.21-24)
-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 (7.8-13)
-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 (9.23-27)
- 프랑스 국빈방문,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제12차 ASEM 정상회의,
제1차 P4G 정상회의 참석 및 덴마크 공식방문 (10.13-21)

□ 해외순방 수행원 현황

-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시 청와대 수행원은 약 55명 내외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및 안보실 직원으로 구성됨.(※대통령 경호처 별도)

- 단, 정상 해외 순방시 수행원 상세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개가 불가한 바, 공식 및 주요수행원을 제출하고자하니 양해 바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외 방문행사 공식 및 주요수행원

(1) 미국 방문 (2017.6.28. ~ 7.2.)

1. 강경화 외교부장관
2.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 장하성 정책실장
4. 안호영 주미대사 내외
5.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6. 김현철 경제보좌관
7.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8.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9.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10.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2) 독일 공식방문 및 G20(함부르크) 정상회의 참석 (2017.7.5. ~ 10.)

독일 공식방문	G20 정상회의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강경화 외교부장관	2. 강경화 외교부장관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4-5. 이경수 주독일대사 내외	3. 이경수 주독일대사
6.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4.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7. 김수현 사회수석	5. 김수현 사회수석
8. 김현철 경제보좌관	6. 김현철 경제보좌관
	7. 이해민 G20 세르파
9. 박수현 대변인	8. 박수현 대변인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11.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1.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2.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12.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	

(3)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러시아 방문 (2017.9.6. ~ 7.)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강경화 외교부장관
3.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4.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5.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6.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7.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8. 김현철 경제보좌관
9.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1.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

(4)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2017.9.18. ~ 22.)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강경화 외교부장관
3. 도종환 문체부장관
4. 조태열 주유엔대사 내외
5. 장하성 정책실장
6.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7. 홍장표 경제수석
8. 박수현 대변인
9.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10. 이욱현 의전장
11.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5)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및 APEC(다낭), 한-ASEAN/ASEAN+3/EAS(마닐라) 정상회의 참석 (2017.11.8. ~ 15.)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APEC 정상회의	한-ASEAN, ASEAN+3, EAS 정상회의
1. 강경화 외교부장관	1. 강경화 외교부장관	1. 강경화 외교부장관
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김재신 주필리핀대사 내외
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4.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 내외	4. 이 혁 주베트남대사 내외	4.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5.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5.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5. 운영찬 국민소통수석
6. 운영찬 국민소통수석	6. 운영찬 국민소통수석	6. 김현철 경제보좌관
7. 김현철 경제보좌관	7. 김현철 경제보좌관	7. 반장식 일자리수석
8. 홍장표 경제수석	8. 반장식 일자리수석	8.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9.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9. 이태호 통상비서관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0.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한-아세안, APT, EAS SOM 대표)
11. 유정현 외교부 남아태국장	11.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2.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APEC SOM 대표)	

(6) 중국 국민방문 (2017.12.13. ~ 17.)

베이징	충칭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강경화 외교부장관	1. 강경화 외교부장관
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5. 장하성 정책실장	4. 장하성 정책실장
6-7. 노영민 주중국대사 내외	5. 노영민 주중국대사
8.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6.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9.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7.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0. 김현철 경제보좌관	8. 김현철 경제보좌관
11.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12.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9.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3.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1-12. 안성국 주청두총영사 내외
14.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	13.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

(7) 베트남 국민방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공식방문 (2018.3.22.~28.)

베트남	UAE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 강경화 외교부 장관
3. 강경화 외교부 장관	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임종석 비서실장
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5-6. 박강호 주UAE대사 내외
6. 장하성 정책실장	7.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7-8. 이 혁 주베트남대사 내외	8.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9.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9. 김현철 경제보좌관
10. 홍장표 경제수석	10.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11. 김의겸 대변인	11. 김의겸 대변인
12.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2.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3.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3.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4.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국장	14. 홍진욱 외교부 아중동국장

(8)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동경- (2018.5.9.)

1. 강경화 외교부장관
2. 백운규 산업부장관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4. 장하성 정책실장
5. 이수훈 주일대사
6. 노영민 주중대사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8. 김현철 경제보좌관
9.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10.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1.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2.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SOM 대표)
13.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

(9) 미국 방문 (2018.5.21.~24.)

1. 외교부장관
2. 국가안보실장
3. 정책실장
4-5. 주미대사 내외
6. 국가안보실 2차장
7. 국민소통수석
8. 외교부 의전장
9. 외교정책비서관
10. 외교부 북미국장

(10) 러시아 국민 방문 (2018.6.21.~24.)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강경화	외교부장관
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7-8.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내외
9.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10. 홍장표	경제수석
11. 김현철	경제보좌관
12. 김의겸	대변인
13.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4.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5.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11) 인도 및 싱가포르 국민방문 (2018.7.8.~13.)

인 도	싱가포르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2.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2.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3. 장하성 정책실장	3. 장하성 정책실장
4-5.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	4-5.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 내외
6.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8.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8.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9. 김현철 경제보좌관	9. 김현철 경제보좌관
10.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10.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11.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1.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12.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2.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3.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국장	13.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국장

(12)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 (2018.9.23~27.)

1. 강경화 외교부장관
2-3. 조태열 주유엔대사 내외
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5. 장하성 정책실장
6.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8. 김의겸 대변인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11.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3) 프랑스 국민방문,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제12차 ASEM 정상회의, 제1차 P4G 정상회의 참석 및 덴마크 공식방문 (10.13-21)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2. 강경화 외교부 장관	2.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5-6. 최종문 주프랑스 대사 내외	5-6. 최종현 주이탈리아 대사 내외	4-5. 이백만 주교황청대사 내외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7.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6.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8.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8.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7.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9. 윤종원 경제수석	9. 윤종원 경제수석	8. 윤종원 경제수석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1.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1.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0.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2.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12.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11.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ASEM·벨기에		P4G·덴마크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1. 강경화 외교부 장관	
2.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 김은경 환경부 장관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4-5. 김형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내외	4-5. 최재철 주덴마크대사 내외	
6.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6.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7.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7.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8. 윤종원 경제수석	8. 윤종원 경제수석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9.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10.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0.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11.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11.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49. 행정관급 이상 현재 공석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비고
정 원	288	12	42	234	
현 원	277	12	41	224	
결 원	△11	-	△1	△10	

50.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별 위원장, 위원 명단, 주요경력,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

- ☐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다만,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임용일자(임기)	이름	주요경력
위원장	'17. 9.12 (2년)	정해구	·現 성공회대학교 교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
위원	'17.12.15 (2년)	고석규	·現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고유환	·現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현) ·민주평통 기획조정위원장(현)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장(현)
위원	'17.12.15 (2년)	곽병창	·現 우석대학교 교수 ·전주시 전주정신위원회 위원(현)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전북 문화예술진흥위원
위원	'17.12.15 (2년)	곽채기	·現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행정대학원장(현) ·전남대학교 교수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위원	'17.12.15 (2년)	곽현근	·現 대전대학교 교수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현) ·국민권익위 자체평가 위원(현)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현)
위원	'17.12.15 (2년)	권혜원	·現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울시 다산콜재단 비상근이사(현)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감사(현)
위원	'17.12.15 (2년)	김경미	·現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양암학회 재무위원장(현) ·대한암학회 재무이사(현) ·대한병리학회 교육수련이사

위원	'17.12.15 (2년)	김경희	·現 중앙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방송위 보도교양 심의위원
위원	'17.12.15 (2년)	김국진	·現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김남준	·現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현) ·국민성장 검찰 개혁단장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05~06)
위원	'17.12.15 (2년)	김명환	·現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시카고대 초빙교수
위원	'17.12.15 (2년)	김성경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현) ·싱가폴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성공회대학교 HK 연구교수
위원	'17.12.15 (2년)	김수연	·現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현)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연명	·現 중앙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위원	'17.12.15 (2년)	김연순	·現 (협)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법무법인 대양변호사
위원	'17.12.15 (2년)	김용기	·現 아주대학교 교수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추진단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위원	'17.12.15 (2년)	김용현	·現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우철	·現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청와대 재정기획관실 정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유찬	·現 홍익대학교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KPMG Frankfurt 시니어 컨설턴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김은경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외대 교수협의 회장(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현)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현)
위원	'17.12.15 (2년)	김인희	·現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현)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위원	'17.12.15 (2년)	김재훈	·現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한국사회경제학회 부회장(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지역분과 간사
위원	'17.12.15 (2년)	김좌관	·現 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 ·국민성장 환경에너지 팀장 ·(사)인본사회연구소 소장
위원	'17.12.15 (2년)	김준형	·現 한동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외교분과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통 상임위원(현)
위원	'17.12.15 (2년)	김지미	·現 김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법무법인 대양 변호사
위원	'17.12.15 (2년)	김지윤	·現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후 연구원, 몬트리올대
위원	'17.12.15 (2년)	김창룡	·現 인재대학교 교수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위원	'17.12.15 (2년)	김태만	·現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럼지식공간 공동대표(현) ·문화예술협동조합 플랜비 이사장(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위원(현)
위원	'17.12.15 (2년)	김흥규	·現 아주대학교 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5 (2년)	류건우	·現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
위원	'17.12.15 (2년)	문성중	·現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현)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인사위원(현) ·제주도 성과평가위원(현)
위원	'17.12.15 (2년)	문장렬	·現 국방대학교 교수 ·NSC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담당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육군3사관학교 교수
위원	'17.12.15 (2년)	박경환	·現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지리학회 부회장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담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	'17.12.15 (2년)	박진도	·現 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학교 명예교수(현) ·충남대학교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위원	'17.12.15 (2년)	박진희	·現 동국대학교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현)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전임연구원
위원	'17.12.15 (2년)	박진희	·現 우석대학교 부교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현) ·군산의료원 이사(현) ·우석대학교 간호학과장

위원	'17.12.15 (2년)	박찬희	·現 중앙대학교 교수 ·Deloitte Consulting 자문역 ·국가비전2030 기획 ·대우그룹 회장보좌역
위원	'17.12.15 (2년)	배기찬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위원	'17.12.15 (2년)	서유경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NGO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현) ·전국여교수연합회 부회장 겸 서울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정치사상분과위원장
위원	'17.12.15 (2년)	서형원	·現 청암대학교 총장 ·주크로아티아 대사 ·주일본 공사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국장
위원	'17.12.15 (2년)	석재은	·現 한림대학교 교수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
위원	'17.12.15 (2년)	성정현	·現 특허법인 총정 대표변리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현) ·동국대 의로기기산업대학원 겸임교수(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현)
위원	'17.12.15 (2년)	소순창	·現 건국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현)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의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손은일	·現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경남 6차산업지원센터 협의회 회장(현) ·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공동대표(현) ·전국혁신도시포럼 경남대표(현)
위원	'17.12.15 (2년)	심미선	·現 순천향대학교 교수 ·광고자율심의위원(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현)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안성호	·現 대전대학교 교수 ·행자부 자치분권전략회의 공동위원장 ·국민성장위원회 분권균형발전분과 위원장
위원	'17.12.15 (2년)	안종주	·現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겨레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성장 안전사회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위원	'17.12.15 (2년)	양무진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현) ·민주평통 상임위원(현)
위원	'17.12.15 (2년)	오태규	·現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TF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자문위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관훈클럽 총무
위원	'17.12.15 (2년)	오현석	·現 (주)지역아카데미 대표 ·(사)농정연구센터 이사(현) ·(사)한국농어촌개발전문기관협회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FTA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원희연	·現 부산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성대학교 교수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부산광역시 물류정보작관
위원	'17.12.15 (2년)	유남영	·現 유남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위원	'17.12.15 (2년)	윤순진	·現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현)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위원	'17.12.15 (2년)	윤황	·現 선문대학교 교수 ·국립경찰대학 연구관 ·정책공간 국민성장연구소 동포이민특위 간사 ·중부미래포럼 상임대표(현)
위원	'17.12.15 (2년)	이건범	·現 한신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기획처장, 교무처장 ·금융위원장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이건세	·現 건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실장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위원	'17.12.15 (2년)	이미경	·現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위원(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현)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위원	'17.12.15 (2년)	이소영	·現 대구대학교 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현)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장(현) ·대한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현)
위원	'17.12.15 (2년)	이윤석	·現 계명대학교 교수 ·행자부 인구감소지역발전자문단 위원(현)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현) ·게이오대학 겸임교수
위원	'17.12.15 (2년)	이재원	·現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서비스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이진	·現 건양대학교 교수 ·건양대 평생교육대학원장(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현)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이한주	·現 가천대학교 교수 ·가천대 부총장(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 ·한국경제사회학회 고문
위원	'17.12.15 (2년)	임채원	·現 경희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소 연구원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원	'17.12.15 (2년)	임춘택	·現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국민성장 과학기술 간사 ·KAIST 교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위원	'17.12.15 (2년)	장준호	·現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장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현) ·미국 UC SanDiego 초빙교수
위원	'17.12.15 (2년)	정기환	·現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현) ·국제카톨릭농민운동연맹(FIMARC) 회장
위원	'17.12.15 (2년)	정대영	·現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우리술문화원 이사장(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금융팀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위원	'17.12.15 (2년)	정동일	·現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림대 교수 ·코넬대 방문교수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위원	'17.12.15 (2년)	정상호	·現 서원대학교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회장(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현) ·한국NGO학회 이사(현)
위원	'17.12.15 (2년)	정태호	·現 경희대학교 교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위원	'17.12.15 (2년)	정희정	·現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문화일보 기자
위원	'17.12.15 (2년)	조원희	·現 국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위원	'17.12.15 (2년)	조의연	·現 동국대학교 교수 ·새로운 불교포럼 고문 ·동국대학교 경영관리실장 ·한국 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조재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문재인대통령 선대위 기획단장 ·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위원	'17.12.15 (2년)	조흥식	·現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정책학회 회장(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위원	'17.12.15 (2년)	진시원	·現 부산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위원	'17.12.15 (2년)	최성숙	·現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부회장(현)
위원	'17.12.15 (2년)	최현선	·現 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와 커뮤니티 연구소장(현)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국정관리학회 상임이사 및 위원장(현) ·University of North Florida 교수
위원	'17.12.15 (2년)	허문경	·現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기획운영위원장(현)

위원	'18.1.10 (2년)	김정인	·現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현)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위원장(현) ·정의기억재단 이사(현)
위원	'18.1.10 (2년)	박복영	·現 경희대학교 부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운영위원장
위원	'18.1.10 (2년)	박준식	·現 한림대학교 교수 ·한림대학교 비전협력처장(현) ·지역사회학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위원	'18.1.10 (2년)	서복경	·現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위원	'18.1.10 (2년)	소준노	·現 우석대학교 교수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현) ·전북교수연합연구회 고문(현) ·정책공간 국민성장 국민참여센터장
위원	'18.1.10 (2년)	어미정	·現 경기도시공사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현)
위원	'18.1.10 (2년)	오유석	·現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비판사회학회 회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국회 선거제도개혁자문위원
위원	'18.1.10 (2년)	이석범	·現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현) ·문재인후보 법률,안보,정책특보
위원	'18.1.10 (2년)	이장원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 조직위원장(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위원	'18.1.10 (2년)	임지봉	·現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위원	'18.1.10 (2년)	조영철	·現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위원	'18.1.10 (2년)	조정아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위원	'18.1.10 (2년)	최경숙	·現 골든씨클재단 이사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선대위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위원	'18.1.10 (2년)	최민희	·現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방송위 상근부위원장
위원	'18.1.10 (2년)	홍선미	·現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총괄위원회 평가위원(현)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위원(현)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국정과제 이행 추진 및 국가중장기 정책 개발
 - 설 립 일 : '17.9.5
 - 근거법령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자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위촉직 위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일자리 정책 기획 조정
- 설 립 일 : '17.5.16
- 근거법령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2017.10.10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CS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파트너 첫눈 CEO
위원	"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 공동위원장 갤럭시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	"	김흥수	현대자동차 상품기획3실장 한국자동차공학회 정회원 현대차 제품신뢰성확보실장
"	"	문용식	(사)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주)나우콤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주)한국출판정보통신 이사
"	"	박찬희	SKT 커뮤니케이션플랫폼 본부장 SKT 상품개발 본부장 NHN 비즈니스플랫폼 센터장
"	"	백승욱	루닛 대표 現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초빙교수 KAIST 전자공학 박사
"	"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특임교수 지능정보포럼, 인공지능산업협의회 회장
"	"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오픈넷 이사 다음커뮤니케이션 글로벌부문장
"	"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SK 커뮤니케이션즈 CE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	"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장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정회원
"	"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
"	"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산업부 마이크로로봇센터장
"	"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과기정통부 창의연구단장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전문위원
"	"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상임이사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장
"	"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IoT SW보안 국제공동연구센터장 안랩 최고기술책임자(CTO)
"	"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장 정보통신 미래모임 회장
"	"	한재권	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 이사 한국로봇학회 조직위원
"	"	강수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정회원 항우연 여성과학기술인 책임담당관
"	"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 한국도시지리학회 이사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자문위원회 간사
"	" (당연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LG CNS 사업지원본부장(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	"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대응체계 구축
- 설 립 일 : '17.8.22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임기)	성명	주요 이력
위원장	2017.8.16. (2년)	송재호	現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06~'08)
위원	2017.10.26 (2년)	강태호	現 동국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사)경북정책연구원 원장
위원	2017.10.26 (2년)	강현수	現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균형위 제도운영 전문위원('03~'06)
위원	2017.10.26(2년)	김영화	現 대구참여연대 고문, 경북대학교 교수 現 대구시 여성사회교육원 공동대표 대구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2017.10.26(2년)	김향자	現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시 미래문화전략TF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위원회 자문위원
위원	2017.10.26(2년)	나종만	現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05~'07)
위원	2017.10.26(2년)	류장수	現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지역위 교육인재양성 전문위원('16~'17)
위원	2017.10.26(2년)	류한호	現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광주대학교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위원	2017.10.26(2년)	박소영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위원	2017.10.26(2년)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균형위 수도권관리전문위원('06~'08)
위원	2017.10.26(2년)	이경미	現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 지역위 평가자문단 위원('14, '15, '17)
위원	2017.10.26(2년)	이기원	現 한림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강원랜드 하이원희망재단 이사 균형위, 지역위 평가자문단 위원('05~)
위원	2017.10.26(2년)	이은정	現 나주골 참살이농장 대표 나주시·화순군 노동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 실장 나주시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위원	2017.10.26(2년)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기획실장
위원	2017.10.26(2년)	이태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역공약TF팀장 (재)한국보건복지개발원 원장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원	2017.10.26(2년)	진영효	(주)두리공간연구소 소장 국토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2017.10.26(2년)	한대회	<사직절차 진행 중>
위원	2017.10.26(2년)	한승희	(주)한국자금중개 사장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0~'11)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
- 설 립 일 : '03.4.7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자치분권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 명	주요이력
위원장	‘18.1.23 (2년)	정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 원	"	김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위 원	"	김중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 · [현] 대한민국의 지방신문협의회 회장 · [현]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 행안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위 원	"	안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울산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주임교수 · [현]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 한국지방정부학회 석외위원
위 원	"	이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건국대 충주 글로벌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 [현]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 원	"	김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북보건과학대 복지행정과 교수 · [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자문위원 · [현] 충북 인사위원회 위원
위 원	"	최윤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 · 고려대 경상대학장 경영정보대학원장 · 국회의원 자문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위 원	"	이재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대 명예교수 · 경기대 부총장, 대학원장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위 원	"	이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구청장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위 원	"	최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우석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정책실장 · 박원순 시장 희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 원	"	육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위 원	"	안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우수입법의원선정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 원	"	김광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
위 원	"	조승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 명	주요이력
위 원	‘18.1.23 (2년)	강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
위 원	"	신윤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강원도 규제개혁위원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1기,2기)
위 원	"	최승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인행정학회 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위 원	"	양선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위 원	"	김윤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도 시흥시장 ·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위 원	"	윤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현] 지방분권 리더스클럽 공동대표
위 원	"	조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 원	"	박승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 공동대표
위 원	"	최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 [현]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 제15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 원	"	김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정발전연구위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지방자치발전계획 수립

· 설 립 일 : '13.9

· 근거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부위원장	'17.09.29 (2년)	김상희	- 국회(19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지속가능발전위 위원장(참여정부)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위원	'17.09.29 (2년)	장운숙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 -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 셀트리온 전무
위원	'17.12.18 (2년)	김창엽	- 現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現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위원	'17.12.18 (2년)	김희삼	- 現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 現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위원	'17.12.18 (2년)	박신영	- 現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주택회 회장
위원	'17.12.18 (2년)	소라미	- 現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17.12.18 (2년)	양난주	- 現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現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위원장 -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 한국사회복지사업학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윤홍식	- 現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 시민복지위원회 돌봄분과장 -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위원	'17.12.18 (2년)	이원재	- 現 LAB2050 대표 - (재)여시재 기획이사 - 희망제작소 소장 -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위원	'17.12.18 (2년)	임윤옥	- 現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現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 現 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장지연	-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現 한국사회보장학회 부회장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위원	'17.12.18 (2년)	정영애	- 現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現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한국여성학회 회장
위원	'17.12.18 (2년)	제현주	- 現 ㈜엘로우독 이사 - 現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협동조합 롤링디스크 대표/이사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	'17.12.18 (2년)	조소담	- 現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CEO) & 콘텐츠 총괄 디렉터 (CCD) -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미디어&여성 개척자 부문 선정 : 2017 미디어, 여성 개척자 부문 30인 - 한국일보 2030 세상보기 칼럼니스트
위원	'17.12.18 (2년)	김주영	- 現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現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3선) -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4선)
위원	'17.12.18 (2년)	최종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일자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원	'17.12.26 (2년)	김준동	- 現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조정실장·에너지지원실장
위원	'17.09.29 (2년)	이재갑	- 現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	'17.09.29 (2년)	김현미	- 現 국토교통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진선미	- 現 여성가족부 장관 - 19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김동연	- 現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위원	'17.09.29 (2년)	김부겸	- 現 행정안전부 장관 - 제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위원	'17.09.29 (2년)	유은혜	- 現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위원	'17.09.29 (2년)	박능후	- 現 보건복지부 장관 - 제24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제17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설 립 일 : '05.9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o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외 당연직 5명*, 민간위원 20명

*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o 위원장 및 민간위원 명단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장		공석	
위원	‘17.12.7 (2년)	강윤희	英 글라스고대 러시아지역학 박사 경제발전공유사업 러시아 정책자문 국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권순엽	美 콜럼비아 법대 J.D. SK주식회사 정보통신실장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위원	‘17.12.7 (2년)	권영경	연세대 경제학 박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위원	‘17.12.7 (2년)	김광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
위원	‘17.12.7 (2년)	김민기	중앙대 의학박사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위원	‘17.12.7 (2년)	김태유	美 콜로라도대 경제학박사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직명대사
위원	‘17.12.7 (2년)	김효선	美 아리조나대 자원경제학 박사 UN개발국 자원탐사 담당관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위원	‘17.12.7 (2년)	박미옥	美 로드아일랜드대 이학박사(화학) 한국해양학회 부회장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회 위원
위원	‘17.12.7 (2년)	박종환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 경찰종합학교 교장 충북지방경찰청장
위원	‘17.12.7 (2년)	성원용	러 성페테르부르크대 경제학 박사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안병민	日 쓰쿠바대 행정학 박사 한국교통연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연구소장 남-북-러 철도전문가회담 대표
위원	‘17.12.7 (2년)	이건기	한양대 건축공학 석사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위원	‘17.12.7 (2년)	이재영	러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 유라시아학회 회장 Valdai Club 및 Astana Club Expert

직책	위촉일자 (임기)	성명	주요이력
위원	‘17.12.7 (2년)	이해정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조민행	고려대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원	‘17.12.7 (2년)	조봉현	동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17.12.7 (2년)	조영남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방문학자 북경대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위원	‘17.12.7 (2년)	조정훈	美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여시재 부원장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위원	‘17.12.7 (2년)	최아진	美 듀크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장
위원	‘17.12.7 (2년)	황진회	서강대 경영학 박사 수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설 립 일 : ‘17.8.21
- 근거법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8.25)

□ 국가교육회의

○ 위원회 구성

직책	위촉일자 (임기)	이름	주요이력
의장	‘17.10.10~’18.10.9 (1년)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경기도교육감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동연	한국장학재단 경영고문 아주대학교 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박능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환경부 차관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이재정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 경기도교육감 참여네트워크 대표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장호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단국대학교 총장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단장
위원	‘17.9.12. (당연직 위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강경숙	제4차산업혁명 스마트러닝 미래융합교육학회 상임이사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상임이사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이사(부회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강남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권호열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정책포럼 위원장 교육부 대학정보화정책자문단 정보화기반분과위원장
위원	‘17.12.12~’18.12.11 (1년)	김대현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교무처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직책	위촉일자 (임기)	이름	주요이력
위원	'17.12.12~'18.12.11 (1년)	김정안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서울 은평고등학교 교사 서울여자고등학교 교사
위원	'17.12.12~'18.12.11 (1년)	김진경	중국 소주대학 초빙교수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전동중학교 교사 양정고등학교 교사
위원	'17.12.12~'18.12.11 (1년)	박명림	한국인권재단 이사 한국통일포럼/한반도포럼 연구이사 중국 길림대학교 해외객좌교수
위원	'17.12.12~'18.12.11 (1년)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장 세종시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 세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	'17.12.12~'18.12.11 (1년)	장옥선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경기도 수업분석교과교육연구회 회장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수영초등학교 교장
위원	'17.12.12~'18.12.11 (1년)	황선준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

○ 위원회 주요업무, 설립일 및 근거법령

- 주요업무 : 교육, 학술,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련 자문 및 정책 제안
- 설 립 일 : '17.9
- 근거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1. 직원 징계 관련 비위자 적발현황 및 징계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2. 자체 징계 및 외부 수사기관 이첩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3. 대통령 및 청와대 홍보 관련 지출내역(행사비, 대언론 지출
내역, 홈페이지 개설비 등 홍보 관련 지출내역 일체)

- ☐ 2018년 청와대 국문·영문·어린이 홈페이지(3종) 운영 관련 예산은
총 610,000 천 원입니다.

54.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를 간접고용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5. 정부 출범 후 포상현황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 석 춘 위 원

1. 최근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위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위촉일	비 고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유 홍 준	2018. 1. 23.	

2.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 ☐ 대통령 공약사항을 답아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3.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 통보받은 일시, 인적사항(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해당기관의 조치사항,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1건, 처분결과 통보 10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 최근 5년간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 연번, 날짜, 성명, 직급, 내용, 금액

☐ 현 정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최근 5년간 업무보고 자료 일체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 업무현황보고 별첨합니다.

6.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억원)

'14		'15		'16		'17		'18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841	781	887	856	890	844	881	751	899

8.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 충원 사유, *3급 이상은 간단 이력 포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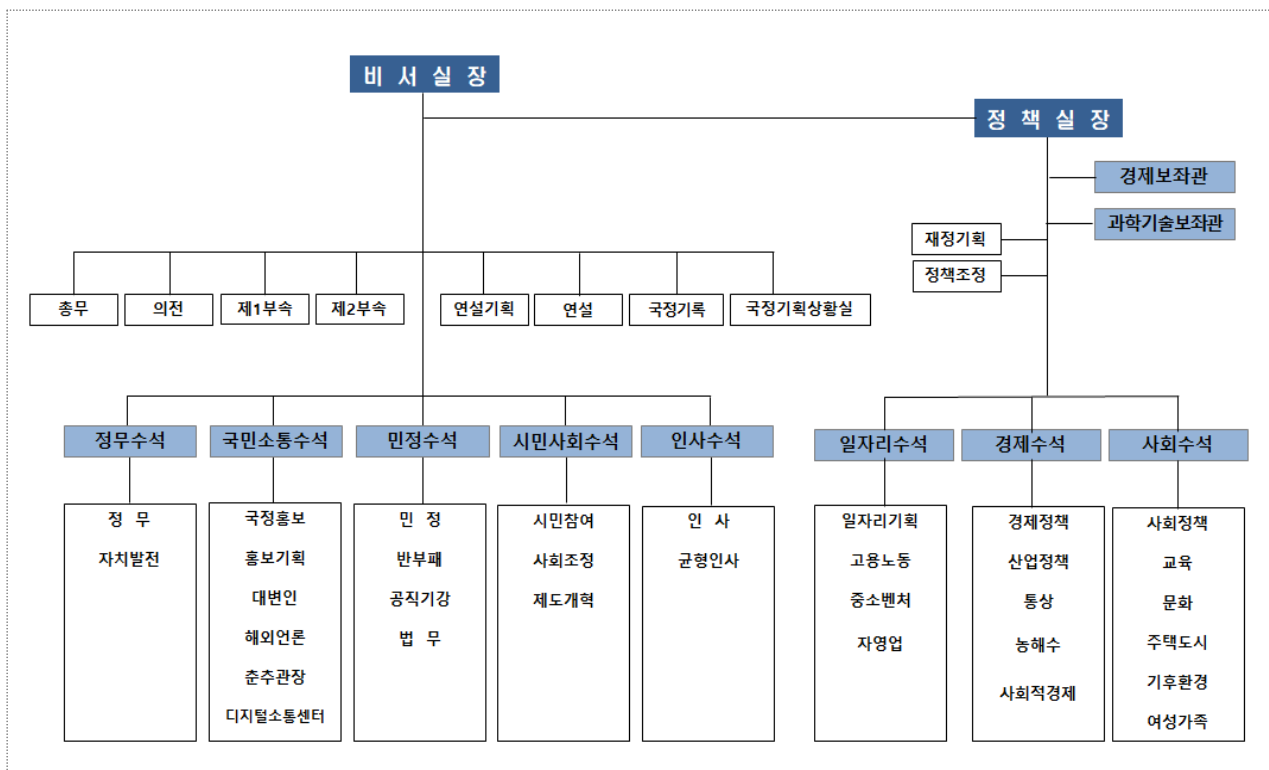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주요 직위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현황

□ 조직 및 인원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장·차관급)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9명임

<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 >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43	12	42	234	155
현 원	429	12	41	224	152
결 원	△14	-	△1	△10	△3

붙임 2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 현황

(2018. 10월 기준)

○ 비 서 실 장	임종석	○ 민정비서관	백원우
○ 정 책 실 장	장하성	○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 정 무 수 석	한병도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법무비서관	김형연
○ 민 정 수 석	조 국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 인 사 수 석	조현옥	○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 일 자리 수 석	정태호	○ 인사비서관	김봉준
○ 경 제 수 석	윤종원	○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 사 회 수 석	김수현	○ 재정기획관	박종규
○ 경제보좌관	김현철	○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
○ 총 무 비 서 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 의전비서관	김종천	○ 중소벤처비서관	주 현
○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 연설비서관	신동호	○ 통상비서관	박진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 정무비서관	송인배	○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 교육비서관	이광호
○ 국정홍보비서관	-	○ 문화비서관	남요원
○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 대 변 인	김의겸	○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 춘 추 관 장	권혁기		
○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붙임 3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이상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임 종 석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무부시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6, 17대 국회의원 	
장 하 성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 위원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 병 도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윤 영 찬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 • 네이버 부사장 • NHN 대외협력담당 이사 •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조 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용 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조현욱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정태호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 19대 선대위 정책상황실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무비서관 • 국회의원 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수현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원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9. 청와대비서실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
(인적사항, 현소속, 전소속)

- 대통령비서실은 군, 경찰, 외무공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보안, 기타 국가 주요기밀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장애인의무고용, 여성의무고용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남 29명, 여 1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2017. 9. 1일자로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비서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법정권고	고용실적	비고
2017년	1명 (2.9%)	2명 (3.2%)	
2018년	1명 (2.9%)	4명 (6.0%)	

※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대통령 비서실 내 친인척 고용 현황(무기직, 용역,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 포함)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친인척을 채용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클린카드 발급 현황

13. 최근 5년간 클린카드 사용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 2018년 10월 현재 클린카드 보유 수량은 290개로서, ‘17년 5월 이후의 클린카드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지난정부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불가)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5월 이후)	2018년도 (9월말 기준)	계
정부구매카드 사용액	3,038	3,105	6,143

○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 행사에 소요되는 식사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14. 업무용카드 사용 지침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4. 업무추진비)의 주요 내용

- 클린카드 사용 및 의무제한업종
- 법정공휴일, 23시 이후, 관할근무지 외 사용 특례
-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건당 50만원 이상)
- 사업추진비(240-01), 관서업무추진비(240-02) 적용범위 등

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별첨합니다.

16. 자체감사, 기타 감사지적 조치사항

☐ 새정부 출범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처리 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 해당사항 없습니다.

19.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前정부, 현정부 구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와 관련하여 정부·유관기관 파견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취업 현황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참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및 취업이력 공시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前 정부, 현 정부 구분)

○ 대통령비서실 민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30.기준)
					1. 1. ~ 5. 8. (전 정부)	5. 9. ~ 12.31. (현 정부)	
총등록건수	30,286	32,483	29,433	28,869	3,022	28,809	26,038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1.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확인 불가하며,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22.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 ☐ 결산심사 관련, 2015회계연도까지의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며,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지적 및 조치결과는 <별첨>과 같음
- ☐ 예산심사 관련, 2017회계연도까지의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며, 2018회계연도 예산심사 관련 국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24.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25.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 이전의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5월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액 (백만원)
1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9.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3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4	2018년 정부 기초 및 정부 중점과제 방향 연구	9.2

〈2018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분	과제명	계약액 (백만원)
1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2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3	평화 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4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 분석	9.5
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6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7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698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9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26. 최근 5년간 소송현황(전정부, 현정부 구분)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 소송	9건	진행 중
헌재 소송	5건	진행 중
민사 소송	7건	진행 중

27. 최근 5년간 퇴사 직원 재취업 현황(前정부, 현 정부 구분)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취업 현황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참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및 취업이력 공시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8.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현황 및 운용 계획

- 부처별 회신 일시 및 회신방법
- 부처별 회신문서 사본 일체
- 부처별 회신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 각 부처별 TFT 구성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9. 2017년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목록 1부. 끝.

30.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폐기 물품 목록 현황

- 2017.5.10. 이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폐기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물품 폐기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물품 중 관리 전환 소요조회, 조달청 무상관리전환 절차를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므로, 폐기물품 전체 현황을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품 현황 >

(‘18. 9월말기준)

구 분	품 종 별 세 부 품 목	금액 (천원)
사무용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서버, 소프트웨어 등	522
산업기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난방비 등	16
사무용집기	책상, 작업용의자, 칸막이, 파일서랍, 탁자 등	370
전기통신기기	방화벽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마이크 등	313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받침대 등 부속품	88
기타잡기기	텔레비전, 선풍기, 자전거, 운동기구 등	153
계		1,462

32. 대통령 추천 인사의 인사별 추천자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 추천자 및 추천이력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총수 면담 및 간담회

- 1) 간담회 개요 및 계획(소요 예산 등 포함)
- 2) 참석 대상자 선정 절차
- 3) 참석대상자 추천자 현황

☐ 경제인 간담회

○ 개요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참석대상자 선정 절차 및 추천자 현황

- 대한상의 추천으로 자산기준 재계순위 15개 그룹(농협제외) 및 우수 중견기업(오뚜기)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반도체공장 준공식(SK하이닉스), 일자리 나누기 현장방문(한화큐셀), LNG추진선 건조현장 방문(대우조선해양) 계기에 대기업 총수를 면담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순방시 국내 투자기업 방문(현대차 중국 충칭공장,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계기에 대기업 총수를 면담하였습니다.

붙임 경제인간담회 개요 및 계획. 1부.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개요

1. 일시/장소

- ☐ 일시 : 2017. 7.27(목) 및 7.28(금)
- ☐ 장소 : 청와대

2. 참석

☐ 7.27(목)

- 기업인(8) : 현대차 부회장(정의선), LG 부회장(구본준), 포스코 회장(권오준), 한화 부회장(금춘수), 신세계 부회장(정용진), 두산 회장(박정원), CJ 회장(손경식), 오뚜기 회장(함영준)
- 대한상공회의소(1) : 회장 (박용만)
- 정부(4) :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 7.28(금)

- 기업인(7) : 삼성 부회장(권오현), SK 회장(최태원), 롯데 회장(신동빈), GS 회장(허창수), 현대중공업 회장(최길선), KT 회장(황창규), 대한항공 사장(조원태)
- 대한상공회의소(1) : 회장 (박용만)
- 정부(4) :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3. 행사내용

- 스탠딩 호프
- 대통령 모두말씀
- 대한상의 회장 인사말
- 기업인과의 대화

34. 국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요구 자료 현황 및 제출, 미제출 현황
-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요구 자료의 제출 소요기간 현황(평균, 최소, 최대 등 구분 기재)
-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요구자료 중 미제출 기간 목록 현황

☐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는 총 734건입니다.

- 다만, 시스템상 기간을 특정한 제출건수나 소요기간에 대한 분석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7년 제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정, 내규, 예규

-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2017년 5월 이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 요청하신 자료는 경호처 소관업무입니다.

37.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 관리

38. 前 정부의 잔여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처리 현황

- 2017년 5월 10일 현재 前 정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잔액은 아래와 같으며, 그 집행잔액은 현 정부에서 사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총 예산액	지난정부 집행액 (1.1.~5.9.)	지난정부 집행잔액 (5.9.현재)
특수활동비	12,488	2,462	10,026
특정업무경비	3,711	1,070	2,641
계	16,199	3,532	12,667

- 한편, 현 정부는 17. 5. 25.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절감 계획*을 발표하였음

*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을 절감

- '17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절감액은 57.2억원으로 자체 절감계획(53억원) 대비 4.2억원(7.9%) 추가 절감함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절감 현황 >

(금액단위: 백만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17년도	12,488	8,812 (70.6%)	3,675 (29.4%)	3,711	1,666 (44.9%)	2,045 (55.1%)

|

39. 2017년 5월 이후 VIP전용기, 헬기, 차량정비 및 운영 현황

☐ 요청하신 자료는 경호처 소관업무입니다.

40. 대통령 지시사항 해당부처 전달 경로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자유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며(관리지침 제3조 및 제4조)
 - 국무조정실장은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에 전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리지침 제6조)
-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각 부처 보고사항 대통령 전달 경호

- 각 부처 보고사항 중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의 추진 실적 등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하며(관리지침 제18조)
-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소관지시사항의 추진이 완료되었을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종료승인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19조)
-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전문**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수행한 해당 부처의 소관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43. 2017년 5월 이후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 보고서

□ 이상 요구자료에 대하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말 현재
까지 (2017.5.10.~2018.9.27.) 개최된 국무회의 회의록 총 78건을 첨부
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 국무회의 회의록 2017년 37건(제21회~제57회), 2018년 41건
(제1회~제41회).

44.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에서 대통령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45.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현재까지의 공문 수·발신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 목록 1부. 끝.

46. 2017년 5월 이후 소속 공무원 연월차 사용 실적

-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직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은 '17년은 법정연가일수 15일 중 12일(80%), '18년은 법정연가일수 20일 중 9일(45%, 9월말 현재)이며, 연가사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 2017년 5월 이후 비서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일자,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 ☐ 대통령비서실은 매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수석실도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 현황

- 관람순서, 순서당 프로그램, 관련 인력, 기념품 및 기념품의 원가, 예산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president.go.kr> 이며,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관람신청’ 탭을 클릭하면, 관람안내, 관람신청, 관람신청 확인 등 관람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람객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은 머그컵, 카드지갑 2종 중 택 1개를 증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관람기념품 예산은 720백만 원입니다.
 - 다만, 기념품 원가 등 상세한 현황은 경쟁입찰한 납품기업의 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간 예산에 한하여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담당인력은 관람해설사 등 총 6명이며, 비서관 이상의 주요 직위를 제외한 직원들의 세부현황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유 섭 위 원(I)

1.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북한경제개발계획’

-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간에 협의하거나 전달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그 발표 또는 공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여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정민 위원장 사임 관련

- 인사 추천한 자
- 결격사유에 대해 검증했는지 여부
(알면서 임명한 건가 몰랐다면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건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 추천자 및 추천이력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위원장 후보자의 결격 여부는 중요한 인사검증 대상이나, 검증 세부 내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非공개자료에 해당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그에 따라 각 부처로 발송한 공문서 일체와 그 효과

□ 일자리 관련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

일시	지시사항	조치사항
'17.5.10	·일자리상황판과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일자리상황판('17.5.24)·일자리위원회('17.5.16) 설치
'17.6.21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17.8.8), 일자리정책5년로드맵('17.10.18) 수립·발표
'17.12.4	·청년고용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 개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개최('18.1.25)
'18.1.25	·청년일자리 여건을 점검하고 정부 각 부처가 특단의 비상한 대책을 마련	청년일자리대책 수립·발표('18.3.15) - 청년일자리 추경안 국회 통과('18.5.21)

4. 경제 관련

1) 소득주도성장 관련 효과

- KDI의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대한 입장

□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임금상승, 가계소득 증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보육료 지원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봄

* 명목임금상승(상용직 1인이상 기업, 전년동기비, %): ('16년) 3.8 ('17년) 3.3 ('18.1/4) 7.9 (2/4) 4.2

* 가계소득(전년동기비, %): ('16년) 0.6 ('17년) 1.7 ('18.1/4) 3.7 (2/4) 4.2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6년) 65.5 ('17년) 69.3

□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음

□ KDI는 동 보고서에서 '14~'18년 실업률 상승을 수요부족, 산업 미스매치,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

□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최근 수년간의 실업률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한 보고서라고 생각함

2) 2016년부터 '분기별 성장률' 현황

- 추가로 세계평균, 유로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한국 성장률의 분기별 비교

3) 2016년부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황

4) 2016년부터 분기별 'OECD 경기선행지수' 현황

- 추가로 세계평균, 유로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한국 경기선행지수의 분기별 비교

5) 2016년부터 분기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증가율' 현황

6) 2016년부터 분기별 '소득분배 개선'(1분위, 5분위) 현황

2) 분기별 성장률

(전기비, %)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유로존	0.5	0.7	0.5	0.6	0.6	0.7	0.7	0.7	0.4	0.4	-
미국	0.4	0.6	0.5	0.4	0.4	0.7	0.7	0.6	0.5	1.0	0.9
독일	0.9	0.4	0.2	0.4	1.1	0.5	0.6	0.5	0.4	0.5	-
프랑스	0.7	-0.2	0.2	0.6	0.8	0.6	0.7	0.7	0.2	0.2	-
캐나다	0.6	-0.3	1.1	0.6	1.0	1.1	0.4	0.4	0.4	0.7	-
이탈리아	0.2	0.1	0.2	0.5	0.5	0.4	0.4	0.3	0.3	0.2	-
일본	0.8	0.2	0.3	0.2	0.7	0.5	0.6	0.2	-0.2	0.7	-
영국	0.3	0.2	0.5	0.7	0.4	0.3	0.4	0.4	0.1	0.4	-
한국	0.6	0.8	0.4	0.7	1.0	0.6	1.4	-0.2	1.0	0.6	0.6

(전년동기비, %)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유로존	1.7	1.6	1.7	1.9	2.1	2.4	2.8	2.7	2.4	2.1	-
미국	1.6	1.3	1.5	1.9	1.9	2.1	2.3	2.5	2.6	2.9	3.0
독일	2.4	2.2	2.1	1.9	2.1	2.2	2.7	2.8	2.0	1.9	-
프랑스	1.1	1.0	1.5	2.0	2.3	3.8	3.1	3.0	2.3	1.9	-
캐나다	1.3	1.1	0.9	1.2	1.4	2.3	2.7	2.8	2.2	1.7	-
이탈리아	1.2	0.8	0.8	1.0	1.3	1.6	1.7	1.6	1.4	1.2	-
일본	0.6	0.8	1.0	1.5	1.4	1.6	2.0	2.0	1.1	1.3	-
영국	2.1	1.7	1.7	1.7	1.8	1.9	1.8	1.4	1.1	1.2	-
한국	3.0	3.5	2.6	2.6	2.9	2.7	3.8	2.8	2.8	2.8	2.0

주: 1) 세계경제 전체 분기별 성장률 발표하는 기관은 없음
 자료: OECD

3) 분기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황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9	99.9	100.2	100.0	100.6	100.7	100.4	100.1	99.8	99.6	98.9

주: 1) 월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단순 평균
자료: 통계청

4) 분기별 OECD 경기선행지수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7	8
유로존	100.2	99.9	99.9	100.0	100.2	100.4	100.6	100.7	100.5	100.1	99.8	99.6
미국	99.1	99.0	99.0	99.3	99.6	99.6	99.6	99.8	100.0	100.0	99.9	100.0
독일	99.4	99.4	99.5	99.8	100.2	100.5	100.9	101.0	100.7	100.2	100.0	99.9
프랑스	100.3	100.1	100.0	100.2	100.4	100.6	100.6	100.6	100.3	99.9	99.6	99.4
캐나다	98.8	99.1	99.5	99.9	100.3	100.4	100.4	100.5	100.2	99.8	99.6	99.5
이탈리아	100.7	100.4	100.0	99.9	99.8	99.9	100.4	100.8	100.8	100.3	100.0	99.8
일본	99.6	99.5	99.6	99.9	100.0	100.1	100.2	100.2	100.0	99.9	99.7	99.7
영국	100.0	99.6	99.6	100.1	100.5	100.5	100.4	100.0	99.6	99.4	99.2	99.1
한국	100.1	99.9	100.3	100.8	101.0	100.9	100.7	100.5	100.1	99.6	99.3	99.2

주: 1) 분기는 월별 경기선행지수 단순 평균
2) 세계경제 전체 경기선행지수는 편제하지 않음
자료: OECD

5) 분기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

(전기비, %)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설비투자	-7.1	2.7	1.6	6.5	4.5	4.3	0.2	-0.7	3.4	-5.7	-4.7
건설투자	5.6	3.2	2.2	1.0	4.2	0.9	1.1	-2.3	1.8	-2.1	-6.4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0.9	1.5	0.7	0.7	0.3	0.5	1.5	1.1	0.3	-0.7	1.0

(전년동기비, %)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설비투자	-3.6	-1.6	-2.5	3.3	16.1	17.9	16.3	8.6	7.3	-3.0	-7.7
건설투자	8.4	9.4	11.0	11.9	11.3	8.5	8.0	3.8	1.8	-1.5	-8.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2.0	4.0	4.1	3.7	3.2	2.2	2.9	3.5	3.5	2.2	1.7

자료: 한국은행

6)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이상가구)

(단위: 배)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6	5.02	4.51	4.81	4.63
2017	5.35	4.73	5.18	4.61
2018	5.95	5.23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7)~9). 2017년 1월 이후 월별 취업자수, 고용률, 자영업자 현황, 현재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여부 및 현재 상황판 내용

□ '17.1월 이후 월별 취업자·고용률·자영업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위: 만명)

	고용률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원자료	전년 동월비 증감	원자료	전년 동월비 증감	원자료	전년 동월비 증감	원자료	전년 대비 증감	원자료	전년 동월비 증감
'17.1	65.5	0.2	2587.8	23.2	552.4	16.6	159.5	6.3	392.8	10.3
2	65.7	0.6	2597.9	36.4	556.8	21.3	159.0	7.6	397.8	13.7
3	66.1	0.9	2644.3	46.3	565.9	12.6	159.9	5.5	406.0	7.1
4	66.6	0.8	2674.4	42.0	569.5	9.9	158.8	3.2	410.7	6.7
5	67.0	0.7	2699.2	37.9	571.8	4.4	160.1	1.1	411.6	3.3
6	67.1	0.6	2702.0	30.2	571.6	3.6	158.8	-0.9	412.8	4.5
7	67.2	0.6	2707.8	31.4	573.1	4.1	158.7	-0.7	414.4	4.9
8	66.8	0.4	2690.4	20.8	573.3	-1.1	158.0	-3.8	415.3	2.7
9	66.9	0.5	2701.1	31.4	576.2	3.9	162.3	0.5	413.8	3.4
10	67.0	0.5	2702.6	28.1	577.5	3.9	165.4	3.0	412.0	0.9
11	67.0	0.3	2701.9	25.7	570.8	0.3	164.4	3.1	406.4	-2.8
12	66.6	0.4	2660.4	25.7	559.0	1.8	164.2	3.7	394.8	-1.8
'18.1	66.2	0.7	2621.3	33.4	553.3	1.0	166.3	6.7	387.1	-5.8
2	65.8	0.1	2608.3	10.4	552.6	-4.2	165.5	6.5	387.2	-10.6
3	66.1	0.0	2655.5	11.2	561.8	-4.1	166.2	6.3	395.6	-10.3
4	66.6	0.0	2686.8	12.3	569.6	0.2	163.7	4.9	405.9	-4.8
5	67.0	0.0	2706.4	7.2	572.4	0.7	164.3	4.2	408.1	-3.5
6	67.0	-0.1	2712.6	10.6	570.1	-1.5	166.2	7.4	403.9	-9.0
7	67.0	-0.2	2708.3	0.5	570.1	-3.0	165.9	7.2	404.2	-10.2
8	66.5	-0.3	2690.7	0.3	568.1	-5.3	165.1	7.1	403.0	-12.4
9	66.8	-0.1	2705.5	4.5	567.9	-8.3	165.7	3.4	402.2	-11.7

□ 일자리상황판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청와대·일자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일자리상황판 내용은 <붙임> 참고

4-10) 2016년 이후 분기별 국가채무비율 현황

-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입장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현황

	'16년 결산	'17년 결산	'18년 예산(추경)
국가채무비율(%)	38.2	38.2	38.6

※ 국채 발행·상환 일정 차이* 등으로 연도중 국가채무비율 변화가 클 수 있어 분기별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음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상환은 주로 3, 6, 9, 12월에 이루어짐)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국제 비교*시 매우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16년, GDP대비 %) : (한국) 43.7, (OECD 평균) 113.3

- 중기재정계획상 '2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4-1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시점과 주요내용을 표기하여 제출

< 월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0.45	0.99	0.50	0.61	-0.01	0.26	0.43	0.84
2018년	1.34	1.39	0.77	0.37	0.22	0.21	0.34	0.82	1.84	0.58		

<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현황 >

시점	정책명	주요내용
'17.8.2	8.2대책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신혼희망타운 등 서민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정비 등
'17.11.29	주거복지로드맵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 62만호 등 총 100만호 주택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도입
'17.12.1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등록시 세제·건보료 감면 등 혜택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등록DB 구축 등 행정지원 강화
'18.2.20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사업추진 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18.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5년간 최대 88만쌍 신혼부부 및 75만가구 청년에게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로드맵상 지원계획을 확대)
'18.9.13	9.13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내 유주택자 및 실거주목적 아닌 고가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세제·대출혜택 축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 분양관리·청약기준 강화,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 등
'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신규공급 30만호 중 1차로 17곳 3.5만호 선정,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공급 예정

4-12) 문정부 출범 전 16개월과 출범 후 현재까지 집값 증가율 (권역별)

☐ 수도권(월간 집값 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0.04	0.00	0.00	0.04	0.09	0.15	0.14	0.16	0.15	0.26	0.23	0.07
2017년	0.01	0.02	0.08	0.15	0.21	0.35	0.29	0.39	0.16	0.20	0.25	0.25
2018년	0.36	0.46	0.30	0.19	0.10	0.09	0.11	0.24	0.70	0.42		

☐ 서울(월간 집값 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0.05	0.00	0.01	0.08	0.15	0.22	0.23	0.26	0.26	0.43	0.35	0.09
2017년	0.03	0.05	0.13	0.23	0.35	0.66	0.41	0.45	0.07	0.23	0.36	0.59
2018년	0.86	0.94	0.55	0.31	0.21	0.23	0.32	0.63	1.25	0.51		

☐ 5대 광역시(월간 집값 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0.01	0.00	0.00	0.03	0.03	-0.01	0.02	0.06	0.10	0.22	0.23	0.16
2017년	0.08	0.05	0.06	0.11	0.14	0.14	0.16	0.24	0.17	0.14	0.10	0.05
2018년	0.04	0.02	0.04	0.02	-0.04	-0.06	-0.06	-0.07	0.09	0.18		

☐ 8개도(월간 집값 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0.08	0.00	-0.01	-0.02	-0.05	-0.09	-0.08	-0.06	-0.04	-0.01	-0.02	-0.01
2017년	-0.02	-0.02	0.02	0.01	0.04	0.02	0.02	0.04	0.05	0.03	-0.03	-0.05
2018년	-0.12	-0.08	-0.09	-0.12	-0.20	-0.17	-0.19	-0.24	-0.13	-0.15		

☐ 지방(월간 집값 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0.05	0.00	-0.01	0.00	-0.02	-0.05	-0.04	-0.01	0.02	0.08	0.08	0.06
2017년	0.02	0.01	0.04	0.05	0.09	0.09	0.08	0.12	0.10	0.07	0.02	-0.01
2018년	-0.05	-0.04	-0.04	-0.06	-0.13	-0.12	-0.13	-0.17	-0.04	-0.02		

5. 감사원장이 법사위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기관운영 감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 전수조사를 하든지 할 것” 등의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 업무추진비 감사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생각하는가?
- 업무추진비에 대해 재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의 걱정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다만, 2018년도 3월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은 디브레인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전체를 사전 검토한 후 부정사용 의심이 되는 표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 지적사항은 없었음

□ 아울러, 감사원은 '18. 11. 12일부터 착수하는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18. 10. 30. 감사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이번 감사도 성실하게 수감받을 예정임

6.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먼저 개입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달리 “청와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USKI 예산 지원 중단, 원장 교체, 폐쇄 등과 관련해 최소 5차례에 걸쳐 KIEP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 보고 받은 보고서 일체
- 당초 해명이 허위인가? 해명과 달리 USKI 폐쇄과정에 BH가 관여한 것 아닌가?

☐ 2017년 11월 2일, 11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연구소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보고내용
-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 내용 및 조치 사항
- 국민들에게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7.10.3 美측의 관련 첩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고 관계부처 회의를 세 차례(10.16, 10.24, 11.10)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 2017.10.16(월) / 대북 제재 관련 회의 : 부처간 공유 및 상황 평가, 미측과 긴밀 공조 강화
 -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참석
- * 2017.10.24(화) /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 : 진전 상황 공유, 관세청에서 최대한의 검색·수사 조치 이행 결정
 -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해경 참석
- * 2017.11.10.(금). / 北 석탄 반입 등 관련 기업 계도활동 및 안보리 결의 이행체계 점검
 -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해수부, 관세청, 해경 참석
- * 2018.7.20(금) / 석탄 반입 언론보도 등 관련 관계부처 회의
- * 2018.7.30(월) / 상동

□ 관계 부처회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그 발표 또는 공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여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통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엄중성에 대해 관계부처간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동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데 일선기관인 관세청의 조사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동 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수사 원칙상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 이전 발언 관련

8-1)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유는 무엇인가? 당시와 현재 달라진 입장이라면 왜 바뀌게 된 것인가?

- ☐ 고용된 노동자 즉 임금근로자(근로자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및 격차완화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한 것임
-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 등 비근로자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8-2) 여전히 연말이면 고용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하는가?
그 사유는 무엇인가? 당시와 현재 달라진 입장이라면 왜 바뀌게 된 것인가?

☐ 당초 전망보다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

- 제조업·자영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및 업황 부진,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도 부진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수립(10.24일)하는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단기간 내에 고용이 획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연말과 내년으로 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

**9. VIP 유입 순방 중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차관이 청와대를
비운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재 시 DMZ 방문자들 관련 근무 규정**

- ☐ 대통령 부재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 근무 직원의 업무 매뉴얼은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해외순방 등 부재시 관련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유 섭 위 원(Ⅱ)

1. 문재인대통령 지시 사항 현황 및 관리 카드 사본

☐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 관리

2.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으로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사본 일체

☐ 국가안보실에서 동 건 관련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는
없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날짜, 장소, 금액, 사유, 사용자 이름 등)

□ 정부출범(2017년 5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2017년(5~12월)	2018년(1~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	4,500	5,085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우려가 있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등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13억 4,118만 원(43.6%), 위안부피해 할머니, 대한노인회, 북한 고위급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으로 4억 4,738만 원(14.5%),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으로 10억 9,881만 원(35.7%), 각종 회의 준비 경비 등 기타 경비로 1억 8,980만 원(6.2%) 집행

※ 세부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회의 참석 수당, 정책 자문료 지급
내역 : 날짜, 금액, 사유, 수령자 이름 등

- 대통령비서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인이 회의참석 등을 통하여 정책자문이나 국가 업무에 조력을 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집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기타 국가 주요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드루킹 사건관련 자체 조사결과 및 관련 조사서, 보고서 사본 :
송인배 비서관 등

☐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6. 대외경제연구원과 접촉, 면담, 보고 받은 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

- ☐ 2017년 11월 2일, 11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연구소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7. 현재 특별감찰관실 현황(업무, 인력, 임대료 등) 및 감찰관
임명 계획

- ☐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서 합의하여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법
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 및 이행 조치 결과

- 2018. 7. 10. 국군통수권자로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독립 수사단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7. 11.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2018. 7. 16.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7. 20.(1차), 8. 2.(2차) 보고를 받았고, 보고 문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은 상기 문서를 제공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년, 2018년 현재 징계 받은 직원 및 사유 : 내부 자체
감사, 외부 감사 구분 작성

☐ 대통령비서실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처분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휴직 기간 및 업무 복귀 기재)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현정부 출범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총 1명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였으며,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현황
- 첨부파일 확인
12.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구 운영현황 (유지보수횟수, 비용, 유지보수업체)
13. 최근 3년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여민관(1,2,3관), 영빈관, 서별관, 경호처, 춘추관이 소비한 전력량 및 전기요금(월별 기재)

- 2017년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기구 4기는 자체 전문 인력이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량 65,000kWh는 경내 전력시설물 가동에 주 전력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태양광 발전기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내용만 제출하는 점을 거듭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목록

- 주요 업무현황
- 2017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 201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집
- 공문 수·발신 목록
- 정보공개처리 현황
- 정무직 및 대통령 임명직위인 공공기관장 현황
- 2016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2017, 2018, 2019년도 예산 설명자료
- 2016,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 201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 국무회의 회의록
- 반부패정책협의회 보고자료,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일자리 불임자료